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국세채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이 준

국문초록

최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2017년 예산안의 규모(400.7조)가 전년 대비 3.7% 증가하며 처음으로 400조를 넘어서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국세 체납정리 임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체납의 연도별·지역별 현황추이 및 영향요인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합리적인 체납정리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세체납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연구방법과 달리 국가 전체 국세납부실태를 대상으로 국세통계자료에 대한 실제자료 분석연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세체납액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통계청의 사회통계 변수들이 체납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목별로 분류하여 세율변화가 체납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① 지역별 국세체납 관련 i) 지역별 소득수준을 지역내 총생산·1인당 지역내 총생산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는 연구의 예측과 동일한 결과이다. ii) 지역별 소득수준과 유사한 지역별 경제상황을 부도업체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ii) 소득탈루가 용이한 자영업자들은 적발가능성이 낮아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예측을 토대로 국세체납의 경우 비임금근로자 비율(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국세체납액 간 관련성이 없거나 예측과 달리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을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가 과소신고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된 국세를 체납할 경우 세무조사 등의 제재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체납을 적게 한데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iv) 법인세·소득세와 관련성이 높은 고용지표를 사회통계 변수 중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장애인 고용률로 측정하여 국세체납액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국세체납 발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납부 능력이 부족한 실업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체납발생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가 행정의 혜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장애인 고용을 통해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국세 납부성실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v) 공공혜택수준이 높은 경우 납세자들은 이를 조세납부에 따른 혜택이라고 인식하고 납부성실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공혜택수준을 국가통계상 지표로서 사회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여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체육시설 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천 명당 사설학원수로 측정하여 국세 체납발생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지표가 각각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공공혜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② 세목별 국세체납 분석에서는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에서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유인이 커짐에 따라 조세회피 행태가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를 토대로 조세회피의 유형인 국세체납액이 세율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i) 소득세에서 2012년, 2014년 세율변화에 따른 체납발생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율이 높아질수록 체납 발생액이 많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i) 법인세에서 2012년 세율변화에 따른 체납 발생액을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의 예상과 달리 법인세율 변화가 법인세 체납발생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있더라도 감면·공제 등 지원정책들의 복합적 작용에 따라 실제 인식하는 조세부담이 증가했거나 법인이 인식하는 적발가능성이 낮아져 체납유인이 높아진 것이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① 이론적 측면에서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국세체납 통계자료에 대한 정리,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 및 분석틀 제시, 국세체납의 현황 및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국세체납관련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② 정책적 측면에서 체납발생의 영향요인을 고려한 차등화된 체납정리 목표설정·성과평가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세체납정리 및 국가재정확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국세체납, 조세회피, 지역별, 세목별, 체납정리, 국가재정
학 번 : 2013-21887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6
제 1 절 이론적 배경	6
1. 조세의 개념 및 분류	6
2. 조세채납의 개념 및 유형	9
3. 조세채납의 문제점	11
4. 조세회피의 개념 및 유형	12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1. 조세채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6
2.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9
제 3 장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론	28
제 1 절 가설설정	28
1. 지역별 국세채납	28
2. 세목별 국세채납	31
제 2 절 연구방법론	32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2
2. 연구모형 설정	35
제 4 장 국세채납 기술통계	36
제 1 절 연도별 국세채납 통계	36
1. 연도별 변화	36
2. 정권변화에 따른 국세채납 변화	37
제 2 절 월별 국세채납 통계	38
1. 월별 채납발생 현황	38
2. 월별 세무 일정에 따른 국세채납 변화	40
제 3 절 지역별 국세채납 통계	42
1. 2011년 지역별 국세채납	43
2. 2012년 지역별 국세채납	44
3. 2013년 지역별 국세채납	45
4. 2014년 지역별 국세채납	46

제 4 절 세목별 국세채납 통계	47
1. 2011~2012년 세목별 국세채납	47
2. 2013~2014년 세목별 국세채납	48
제 5 장 국세채납의 요인분석	49
제 1 절 지역별 국세채납 분석	49
1. 지역별 소득이 국세채납에 미치는 영향	49
2. 지역별 경제상황이 국세채납에 미치는 영향	55
3. 지역별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국세채납에 미치는 영향	61
4. 지역별 고용이 국세채납에 미치는 영향	64
5. 지역별 공공혜택 수준이 국세채납에 미치는 영향	72
제 2 절 세목별 국세채납 분석	79
1. 소득세율 변화가 소득세 채납에 미치는 영향	79
2. 법인세율 변화가 법인세 채납에 미치는 영향	81
제 6 장 국세채납 요인의 통계분석	83
제 1 절 Spearman 등위상관계수 분석	83
1. 변수의 설정	83
2. Spearman 상관계수 결과	84
제 2 절 상관계수	86
1. 상관계수 결과	86
2. 결과분석	87
제 3 절 회귀분석	88
1. 회귀분석	88
2. 채납발생액과 영향요인과의 관계	88
3. 결과분석	92
제 7 장 국세채납 요인관련 사례분석	94
1. 특정지역의 선정	94
2. 사례의 분석-서울지역과 경북지역의 비교	94
제 8 장 결론	96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96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00
참고문헌	102
Abstract	106

표 목 차

<표 1> OECD 조세분류 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7
<표 2>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종류	8
<표 3> 국세체납의 세목별 분류	9
<표 4> 국세체납의 지역별 분류	10
<표 5> 조세체납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18
<표 6>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27
<표 7> 분석별 측정 변수 요약	34
<표 8> 연도별 국세체납 현황	36
<표 9> 2011~2014년 월별 체납발생 현황	38
<표 10> 월별 주요 세무일정	40
<표 11> 지역별 국세체납 현황	42
<표 12> 2011년 지역별 국세체납 현황	43
<표 13> 2012년 지역별 국세체납 현황	44
<표 14> 2013년 지역별 국세체납 현황	45
<표 15> 2014년 지역별 국세체납 현황	46
<표 16> 2011~2012년 세목별 국세체납 현황	47
<표 17> 2013~2014년 세목별 국세체납 현황	48
<표 18> 2011~2014년 지역내 총생산 및 체납발생 현황	50
<표 19> 2011~2014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및 체납발생 현황	52
<표 20> 2011~2014년 지역별 부도업체수 및 체납발생 현황	55
<표 21> 2011~2014년 지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체납발생 현황	58
<표 22> 2011~2014년 지역별 비임금근로자 비율 및 체납발생 현황	61
<표 23> 2011~2014년 지역별 실업률 및 체납발생 현황	65
<표 24> 2011~2014년 지역별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및 체납발생 현황	67
<표 25> 2011~2014년 지역별 장애인 고용률 및 체납발생 현황	69
<표 26> 2011~2014년 지역별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및 체납발생 현황	72
<표 27> 2011~2014년 지역별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체육시설 수 및 체납발생 현황	74
<표 28> 2011~2014년 지역별 천 명당 사설학원 수 및 체납발생 현황	76
<표 29> 종합소득세율의 변화	79
<표 30> 2011~2014년 소득세 체납발생 현황	80

<표 31> 법인세율의 변화	81
<표 32> 2011~2014년 법인세 체납발생 현황	82
<표 33> 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수 설정	83
<표 34> 체납발생 요인별 Spearman 등위상관계수	84
<표 35> 체납발생 요인별 상관계수	86
<표 36> 서울과 경북지역의 국세체납관련 통계	95
<표 37> 연구 분석 결과 요약	9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국가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국세체납 정리

최근 복지, 교육, 국방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7년 예산안의 규모(400.7조)가 전년대비 3.7% 증가하며 처음으로 400조를 넘어섰고,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 5.3% 증가, 교육 분야 6.1% 증가, 국방 분야 4% 증가 등 정부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예산안¹⁾).

정부는 이렇게 증가하는 재정규모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주요 수단은 조세수입 증가가 될 것이다.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원 발굴을 고려할 수 있는데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세원발굴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과세 가능한 분야를 찾기가 쉽지 않고 과세하는 경우의 납세자 저항을 고려한다면 더욱 어려운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세법상 조세구조를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율조정에 따른 조세의 비효율성 문제와 계층 간 공평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주체의 최적선택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대체효과에 따른 초과손실(Dead Weight Loss)을 유발하고,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재분배 기능을 고려한 누진적 구조라는 점에서 세율구조의 변화는 경제주체의 노동공급 선택에 영향을 주어 비효율을 야기한다. 또한 세율조정은 계층 간 조세부담 수준 변화에 따른 공평성부문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세율변화를 조세수입 확보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조세수입 증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조세구조 하에서 조세체납을 방지하는 것이다. 고소득자 상습체납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고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추적 결과 2016년 상반기에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확보하였고 이는 2015년 상반기에 비해 23.1%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러한

1) 기획재정부 “2017년 정부 예산안” <http://www.budget.go.kr/info/2017/index.html>

체납정리액의 규모는 2014년 기준 18.9조원으로 세수 195.7조원 대비 9%이상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 또한 주어진 세율 구조 하에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는 것이다.

(2) 국세체납실태 분석의 필요성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중요한 조세체납 방지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법적관점에서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절차에 대한 연구이다. 국세 체납 처분의 민간위탁 논의, 국세체납처분의 하자승계 논의 등에 관심에 집중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국세체납이 어떠한 분포로 발생하는지 지역별 분포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국세체납 정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체납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세체납의 현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지역별 차이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조세체납을 주제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조세체납 관련 원인변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체납은 의도성 유무와 무관히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로서 광의의 조세회피 개념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함으로써 한계를 보완하도록 한다.

조세회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주로 기업 또는 개별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세전체의 조세회피 현황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조세회피 관련 조세통계 자료의 미세분화와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 전체의 체납통계를 활용한 본 연구를 통해 조세회피관련 연구들이 가진 한계점 또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대안으로서 조세회피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국세체납 통계를 국가전체 차원에서 실증 분석한다. 기존의 조세회피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원인변수들 및 관련 주요 국가통계변수들이 국가 전체의 체납분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체납정리·방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세체납 통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국세체납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 조세회피관련 연구들은 기업들이나 개별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조세회피 영향변수들을 분석하였으나, 기존 논문과 달리 국세 체납 통계 실증자료를 분석한다. 단순히 체납규모 실태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증자료에 기반하여 국세체납 분포를 시기별·지역별로 분석함으로써 체납방지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지역별 국세체납 통계를 통해 사회통계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① 조세회피관련 이론적 연구에서 주된 변수로 제시되는 소득수준 ② 지역별 경제상황 ③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경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비임금근로자 비율 ④ 주요 세목인 법인세·소득세와 관련이 높은 지역별 고용상황 ⑤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지역별 공공혜택 수준 등이 국세체납과 관련성이 있는지 논의하도록 한다.

셋째, 세목별 국세체납 통계를 통해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된 변수로 제시되는 세율의 변화가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①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소득세 체납변화 ②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법인세 체납변화를 분석하여 세율과 체납과의 관련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국세체납의 시기별·지역별 차이를 기술하고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들을 파악함으로써 현실적인 조세체납 정리방안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기존의 조세회피 행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①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조정환, 1996)에서는 개별납세자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②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김인영·김태석, 2011)에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중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이 무엇 때문에 초래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③ 납세협력비용, 조세회피 및 조세공평성 간의 관계(반태현·송신근, 2014)에서는 기업특성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회피가 조세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부 연구들은 개별납세자의 조세회피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조세회피 모델에 있어서 납세자특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전재표·윤우영, 1996)에서는 개별납세자의 특성변수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관계가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가 전체의 국세납부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조세회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지역 또는 특정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파악에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국가전체의 조세회피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국가 전체차원을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지역별 국세체납 차이에 대해 기술할 수 있고 그 차이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방법

조세회피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론적 분석모형과 실증적 분석모형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론적 분석 모형은 경제학적 모형과 사회심리학적 모형으로 분류되고, 실증적 분석모형은 실험연구, 현장조사연구, 실제자료 분석연구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지역의 납세자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①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조정환, 1996)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②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김인영·김태석, 2011)에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또한 ③ 납세협력비용, 조세회피 및 조세공평성 간의 관계(반태현·송신근, 2014)에서는 창원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표본 선택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고 설문조사 문항의 부정확성 및 응답자의 불성실응답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통계자료에 기반한 실제자료 분석연구를 함으로써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재원조달 수단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조세의 분류

조세를 ① 과세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인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세수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와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하는 목적세로 분류된다.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Sur tax)와 부가세 외의 조세인 독립세로 나눌 수 있다.

OECD는 과세되는 세원의 종류에 따라 4가지로 조세를 분류한다. ① 소득(income and profits)을 세원으로 하는 소득과세에는 주체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고 ② 재산(property)을 세원으로 하는 재산과세에는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③ 소비(consumption)를 세원으로 하는 소비과세에는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고 ④ 마지막으로 과년도 수입과 같은 기타 조세가 있다.

이러한 OECD의 조세분류 체계에 따라 우리나라 국세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OECD 조세분류 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소득과세 (income and profits)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소득세·법인세 감면분)
재산과세 (property)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
소비과세 (consumption)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주세·교통세·개별소비세·금융보험업자수입분),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관세감면분)
기타 (other taxes)	과년도 수입

*Revenue Statistics, SPECIAL FEATURE : TAXES PAID ON SOCIAL TRANSFERS, OECD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5.0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를 과세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인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과세주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현행 조세를 분류하고 근거 법령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아래의 분류 중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 체납통계이다.

<표 2>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종류

조세분류			근거법률
조세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와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5.09.

2. 조세채납의 개념 및 유형

(1) 조세채납의 개념

조세채납이란 과세당국이 납세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납세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납세자의 행위이므로 광의의 조세회피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조세채납의 유형

1) 세목별 분류

국세의 다양한 분류 중 일반적인 분류는 과세대상에 따른 세목별 분류이다. 그러므로 국세채납 또한 세목별로 분류하여 채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며 2014년 세목별 채납실태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국세채납의 세목별 분류

(단위: 억 원)

구분	당해연도 발생액		채납발생총액		정리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목별	3,367,374	202,532	4,963,057	267,932	3,256,847	189,450
소득세	960,826	45,121	960,826	45,121	594,507	33,332
법인세	75,233	11,902	75,233	11,902	50,305	9,121
상속·증여세	8,363	4,726	8,363	4,726	5,506	2,950
부가가치세	1,706,492	73,854	1,706,492	73,854	1,059,821	50,658
과년도 수입	478,558	29,440	2,074,241	94,840	1,462,355	70,214
기타	137,902	37,489	137,902	37,489	84,353	23,175

세목별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의 조세채납 규모가 크며 세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2) 지역별 분류

국세채납은 각 지역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우리나라 과세 당국의 관할에 따라 지역을 16개로 구분하여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별 2014년 국세채납 현황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국세채납의 지역별 분류

(단위: 억 원)

구분	당해연도 발생액		채납발생총액		정리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역별	3,367,374	202,532	4,963,057	267,932	3,256,847	189,450
서울	823,675	59,919	1,272,233	86,156	798,538	54,254
인천	179,700	11,151	310,268	15,752	196,544	11,481
경기	936,799	60,434	1,417,888	78,868	881,279	56,262
강원	86,472	3,427	118,161	4,163	81,807	3,209
대전	89,572	4,178	123,058	5,134	88,718	4,092
충북	94,482	4,400	127,730	5,450	90,571	4,193
충남	129,454	6,697	179,220	8,304	129,052	6,554
광주	80,568	3,579	108,602	4,525	81,944	3,530
전북	85,138	3,785	115,286	4,695	84,141	3,544
전남	74,781	3,094	96,981	3,880	71,482	3,015
대구	146,391	7,030	196,123	8,347	137,202	6,469
경북	147,521	7,148	191,515	8,480	140,176	6,750
부산	218,387	11,403	311,823	14,184	212,748	10,956
울산	66,838	3,906	95,997	4,830	62,548	3,608
경남	172,602	10,778	247,098	13,204	165,754	10,075
제주	34,994	1,603	51,074	1,960	34,343	1,458

국세채납 현황을 보면 당해 연도 발생 채납액이 약 20조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국세채납액이 약 6조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지역이 경기지역 다음으로 국세 채납액이 많고 서울·경기지역의 국세 채납액은 약 12조원으로 전체 채납액의 60% 수준에 이른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조세채납액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조세체납의 문제점

조세정책에서 조세체납이 가지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교적 중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세수의 결손

조세정책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재원조달 수단이다. 정부에서 필요한 재원규모를 산정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 중 가장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조세 정책상으로 예측된 세수규모가 납세자들의 조세체납으로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세체납은 정부의 합리적인 재정계획 운영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부 신뢰를 낮추는 등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2) 성실납부자와 체납자간의 불공평성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납세자들 간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이다. 기존의 형평성 논의는 탈세나 체납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접근하였고 이는 모든 탈세자들이 같은 비율로 조세체납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납세자별로 조세체납의 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세체납을 고려한 납세자들 간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제상 동일한 소득규모와 동일한 세부담을 가지는 두 납세자가 있을 때 조세체납 행태에 따라 서로 다른 세부담을 지게 되므로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조세체납 행태에 따라 공평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자발적인 납세협력 감소로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3) 행정비용의 과다

세무행정의 업무종류는 과세자료업무와 세무조사 및 교육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자료 업무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징세·체납과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로 인한 체납관리업무는 그 자체 업무량이

많아서 큰 행정비용을 유발하는데 세무공무원의 실적과 연계되어 있어 심리적인 부담감까지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세무당국이 가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인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업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체납업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높은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이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4. 조세회피의 개념 및 유형

본 연구에서는 조세체납 실증자료 분석을 통한 체납원인을 검증하기 위해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에 따른 이론적 논의들을 활용한다. 조세체납이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로서 조세회피의 한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분석에 앞서 조세회피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조세회피의 개념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에는 합법적인 절세(tax saving), 위법적인 탈세(tax evasion), 절세와 탈세의 중간적 형태인 조세회피행위(tax avoidance)가 있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절세와 위법적인 탈세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고, 협의의 조세회피 행위는 위법적인 탈세가 아닌 조세부담 경감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① 절세와의 구별

절세행위는 조세법규가 예정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소비세 지출을 낮추기 위해 물품소비를 줄인다든가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의 양을 줄인다든가 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개념만으로 절세와 조세회피를 구분하기는 힘들고 양자의 세법상 목적, 입법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절세는 조세의 입법목적과 무관하여 입법단계에서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은 것이지만, 조세회피는 세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영역인데 세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생긴 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탈세와의 구별

조세회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요건 충족을 전제로 조세청구권 실현을 막는 탈세와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탈세(조세포탈)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요소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의 면탈이다.(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판례²⁾에 의하면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극적 행위만을 탈세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밖에 조세포탈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을 발생시킨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가 없는 단순 불신고, 과소신고 등은 가산세 등의 행정상 제재에 그친다.

Herschel(1978)에 따르면 탈세와 절세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수입, 재정자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조세납부의 소득 등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지 않고 광의의 개념에 따라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조세회피로 본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조세체납은 의도성 유무와 무관히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이므로 조세회피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조세회피의 유형

조세회피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를 최대한 경감시키려는 의도 하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므로 이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세회피 중 문제시 되는 의도적 조세회피의 대표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① 세무자료와 세무정보의 미제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필요한 세무정보를 세무당국에 성실하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고의이든 과실이든 정보의 미제출은 조세회피로 추정

2) 조세포탈 “대법원 1977.5.10.선고, 76도4978판결; 1988.2.9.선고, 84도1102판결 등”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세무신고서의 미제출과 과세대상 자산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 모든 국가가 확일적으로 세무신고서의 미제출을 조세회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회피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세회피 방법이다.

② 소득항목의 허위신고

납세자가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항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것을 매출로 위장·분류하여 신고하거나 수수료나 이자 등을 배당금지급으로 허위 분류하여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

③ 회계처리의 조작

회계장부처리의 조작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 수법 또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중장부의 작성, 매입가액을 과대하게 계상하는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비용공제 등 다양한 회계처리 조작이 있다.

④ 재산의 은닉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소득을 은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형식상 법적 지배권을 면세자나 저소득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귀금속이나 예술품 등의 형태로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은폐하는 행위 등이 있다.

⑤ 조세감면혜택의 남용

특정산업에 주어지거나 특정국가에서 제공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남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지점이나 자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거주지의 자회사에서 남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 간에 기술이전 비용 등을 과소 계상하여 모회사의 과세소득은 감소시키고 지점이나 자회사의 감면 소득은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⑥ 이전가격의 이용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특수 관계자와의 국제거래 시 가격 또는 비용을 조작하여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어느 한 쪽이 국외 특수 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있다.

⑦ 조세피난처의 이용

조세피난처(tax haven)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가 전혀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버뮤다제도나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다.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조세채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법적 관점에서의 연구

윤성만·노희천·김노창(2013)은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국세 채납징수업무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채납징수업무는 개인 정보에 대한 조사·검사업무를 포함하여 민간위탁 시 재산권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점, 사전·사후 관리 비용측면에서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신만중(2011)은 채납과 관련하여 행정법상 채납처분절차상 하자의 승계 여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과세처분과 채납처분은 각기 독자적인 목적과 다른 법률효과를 가진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은 채납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 채납 처분절차상 독촉, 압류, 매각, 충당의 각 행위 사이 또는 처분성이 인정될 경우의 공매처분상의 공매통지 매각결정의 각 행위 사이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는 동일한 행정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결합이므로 후행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선행처분상 위법성이 있으면 그러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한다.

국세 채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법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국세채납처분에 대한 하자의 승계여부와 같은 법 이론적 논의이거나 채납징수업무 민간위탁의 타당성 논의 등이 이루어질 뿐, 우리나라 국세채납의 실태파악과 채납방지를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 국세채납이 연간 세수의 1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 정책적으로 조세채납의 실태 및 원인 파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정책적 관점에서의 연구

임주영·현진권(2002)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채납규모수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채납 요인 파악 및 장·단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 정책방안으로 ① 무신고

및 신고 무납부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세무조사 등 벌칙강화를 통한 성실납부 유도, ② 부실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체납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제도의 활용, ③ 조세불복으로 인한 체납은 징수유예제도의 활용, ④ 체납액 중 높은 결손처리 부분에 대한 고지유예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 정책방안으로는 ① 납세자별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적·효율적 징수업무 추진, ② 납세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서희열·이준규·서정화(2011)는 국세·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논문 및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세 체납세액 징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① 세목별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 체납 정리업무를 징세과에서 전담, ② 고액·상시체납자에 대한 출금금지 및 여권발급제한 등 현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해 규제강화, ③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담보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세체납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체납실태 파악에 있어서 전체적인 체납규모 현황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연구의 결론³⁾에서 자료 확보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국세납부 정보가 개인정보와의 관련성이 높아 세분화된 실증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고, 체납행태에 대한 이론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체납방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체납과 관련된 원인 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체납관련 정책연구 자체가 적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납행태의 원인을 불성실 신고, 부실부과, 불복청구, 결손처리 등 실태에 대한 분류기준 수준으로 파악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조세체납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부족하지만, 조세회피행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념적으로 조세체납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인 조세회피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관련 선행연구들을 조세체납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임주영·현진권(2002) “국세 체납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세무학연구, 제19권, p248 결론부분

<표 5> 조세체납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자	연구결과
법적 관점	윤성만·노희천· 김노창(2013)	체납징수업무는 민간위탁 시 재산권·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관리비용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음
	신만중(2011)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각기 독자적인 목적과 다른 법률효과를 가진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하자승계가 되지 않으나, 조세 체납처분절차상 독촉, 압류, 매각, 충당 일련의 절차는 동일한 행정목적으로 행하여지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됨
정책적 관점	임주영·현진권 (2002)	체납방지를 위해 ① 단기적으로 세무조사 등 벌칙 강화를 통한 성실납부 유도, 과세적부심사제도의 활용, 징수유예제도의 활용, 고지유예제도 도입을 제시 ② 장기적으로 납세자별 정보체계 구축, 납세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정책을 제시
	서희열·이준규· 서정화(2011)	체납방지를 위해 ①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 체납 정리업무를 징세과에서 전담, ② 고액·상시체납자에 대한 출금금지 및 여권발급제한 등 규제강화, ③ 명단공개제도 실효성 담보 제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체납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법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고 정책적인 조세체납의 실태·원인 파악부족 - 체납방지를 위해서는 납세자 입장의 체납관련 원인변수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체납관련 정책연구 자체가 적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성실 신고, 부실부과, 불복청구, 결손처리 등 체납실태를 연구하는 수준에 그침 	

2.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분석모형

이론적 분석모형은 크게 경제학적 모형, 사회심리학적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경제학적 모형에서는 납세자를 기대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경제인이라는 가정 하에 조세회피는 납세자 개인의 최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접근에서 조세회피는 세율, 적발확률, 벌금율의 함수이고 대표적인 연구에는 Allingham과 Sandmo(1972)의 연구가 있다. ② 사회심리학적 모형은 조세회피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이론으로 Schmolders(1959), Mueller(196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성, 납세의식 등의 사회심리학적 변수들이 조세 회피에 영향을 준다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1) 경제학적 모형

납세자는 도덕과는 관계없이 위험중립 또는 위험기피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 회피에 의한 조세 감소액이 조세회피 적발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초과하면 조세회피를 선택하는 기대효용 또는 기대소득 극대화 모형이다.

납세자의 행위가 불확실성 하의 기대효용의 극대화 원칙(principle of maximum expected utility)에 따른다고 가정한 Allingham과 Sandmo(1972)의 조세회피 모형은 다음과 같다.

$$EU(1) = (1-p) \cdot U(y+x) + p \cdot U(y-Fx)$$

p : 세무조사의 주관적 확률

y : 납세자의 세금공제후 소득

x : 조세회피된 세금의 액수

F :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1

기대효용 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납세자는 자신의 주어진 소득수준(x+y)에서 세무 조사를 통해 회피사실이 적발될 확률(p), 적발시 부과되는 가산세수준(F)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대효용(EU)을 극대화하는 수준의 조세회피 수준(x)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Allingham과 Sandmo(1972)의 연구는 Srinivasan(1973), Yitzhaki(1974), Christiansen(1980), Cross와 Shaw(1981), Cowell(1985) 등으로 이어져 오며 세율, 적발확률 등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Srinivasan(1973)은 조세회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Allingham과 Sandmo(1972)의 기대효용 극대화 모형과 비슷한 기대소득 극대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A(Y) = \Pi \cdot [Y - T(Y) - \lambda \cdot P(\lambda) \cdot Y] + (1 - \Pi) \cdot [Y - T\{(1 - \lambda)Y\}]$$

Y : 납세자의 실제소득

Π : 적발확률

$T(Y)$: 실제소득에 대한 세액

λ : 실제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비율

$P(\lambda)$: 벌금을

$Y - T\{(1 - \lambda)Y\}$: 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의 세후소득

$Y - T(Y) - \lambda \cdot P(\lambda) \cdot Y$: 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과 벌금을 모두 낸 후의 소득

기대소득 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납세자는 조세회피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담할 세액과 벌금을 고려하여 납부한 후의 기대소득을 극대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개인의 경우 세금과 벌금차감 후 기대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득의 과소신고 비율을 선택한다고 본다.

경제학적 분석모형의 연구결과들은 ① 납세자가 자신의 조세회피 행위가 적발될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액 신고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②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회피 행위가 적발될 주관적인 확률 및 그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과될 처벌에 입각해서 조세회피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 ③ 납세자는 납세 신고와 관련되는 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모형의 연구 결과 대체로 누진적 조세제도 하에서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하지만 세무조사 횟수나 가산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경제학적 분석모형에 기초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① 납세자의 행동이 순전히 경제적 동기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는 점이다. 납세자는 사회적 존재로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덕성과 무관히 경제적인 동기에 의한 기대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에 소속집단의 납세수준과 도덕성을 고려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② 완전한

지식을 가진 합리적인 납세자라는 가정이 주어졌을 때 연구들은 납세자에 의한 지각과 벌칙 및 실제 세무조사에서의 차이를 무시하게 된다. ③ 효용함수는 개별적인 것임에도 모형을 단순화함에 따라 납세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비화폐적 요소가 기본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2) 사회심리학적 모형

Schmolders(1959), Mueller(1963), Strumpel(1969), Lewis(1979)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온 이 모형은 조세회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이론이다. 조세의식을 넓게는 한 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제도와 국민성, 개인적 기질의 특수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좁게는 납세자의 국가의식, 공공재편익 및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정치적·사회적 이념 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조세부담감은 객관적 조세부담이 조세체계, 재정정보, 개인적 특성 등의 매개변수들의 작용을 통해 주관적으로 세부담이 어떻게 감지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태영·변용환(2013)은 납세의식은 세금을 납부하고자하는 내재적인 동기로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도덕적 의무이며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는 신념·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1,200명의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세계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준법성이 강할수록,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준법성을 향상시키며,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효한 정책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김재희·강윤희(2013)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결정 요인을 알아보고 조세회피 결정 요인에 있어 사회적 추론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는 총 128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조세 대상자의 특성, 개인의 납세의식과 조세에 대한 지식, 조세회피 경험, 그리고 동일한 납세대상이 되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추론 등을 측정하여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세회피에 있어 유사성 추론, 공평성 인식, 납세윤리, 기관에 대한 인식, 조세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특히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납세

의식과 같은 개인적 차원 자체의 힘이라기보다 납세자가 지각하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추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심리학적 모형에서는 조세회피 행위를 분석하면서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된 의식구조, 태도 등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경제학적 모형이 가지는 경제적인 동기만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가정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납세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 실증적 분석모형

실증적 분석모형은 크게 실험연구, 실제자료 분석연구, 현장조사연구로 나눌 수 있다. ① 실험연구의 경우는 Allingham과 Sandmo(1972)의 조세회피 모형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려고 하였고 대표적으로 Spicer와 Becker(1980)의 연구가 있다. ② 현장조사 연구는 연구목적에 맞게 설계를 함으로써 표본의 선정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분석한다. 대표적으로는 Vogel(1974)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③ 실제자료 분석연구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Witte와 Woodbury(198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1) 실험연구

Friedland과 Maital, Rutenberg(1978)는 평균나이 25세의 이스라엘 심리학 전공 학생들 15명을 대상으로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세율 등의 요소와 탈세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세게임을 하였다. 연구 결과 세율이 높아질수록 탈세를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고, 다른 요인이 일정한 경우 남성과 젊은 기혼자들이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높은 연령층이나 독신생활자 및 여성은 탈세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 참가자의 수가 심리학 전공 15명으로 적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고 피실험자들이 항상 순소득 극대화 전략을 취하도록 통제하였다는 점, 실험에서 가정한 적발확률과 벌금율이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Spicer와 Becker(1980)는 콜로라도 대학의 57명을 대상으로 조세게임을 통해 조세체계에서 인식된 불공평성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다른 피실험자는 평균세율 40%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정보 하에서 피실험자의 1/3은 평균세율 65%,

다른 1/3은 평균세율이 15%, 나머지 1/3은 평균세율 40%를 부과한 상황에서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한 사람들(평균세율 65%)은 세금의 약 33%를 탈세하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한 사람들(평균세율 15%)은 단지 약 12%를 탈세하였으며, 다른 사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한 사람들(평균세율 40%)은 약 25%를 탈세하였다. 이 연구는 조세의 공평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조세회피 행위가 감소한다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험연구는 연구대상이 되는 변수를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서 실험도구의 타당성 문제가 제시될 수 있다. 현실적인 실험설계를 하고 실험대상자들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실험과정에서 피실험자들이 실험자들이 실험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실험의도에 따라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현장조사연구

Vogel(1974)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연구하기 위해 1969년 스웨덴 국립중앙 통계국의 조사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조세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설문응답자의 80~90%가 조세회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조세포탈의 기회가 평균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영업소득자는 41%, 비자영업 소득자는 25.6%,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는 24%, 원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31.6%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가 원천징수 되는 경우보다 조세포탈의 기회가 더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탈세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준거집단 소속의 응답자는 탈세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는 준거집단 소속의 응답자에 비해 자신의 탈세기회가 평균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조세회피 행위가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picer와 Lundstedt(1976)는 미국 오하이오 주 도시주변의 주택가에서 130가구의 중·상위 소득계층을 표본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정도와 행정능력, 다른 납세자와의 공평성, 사회적 조세회피 수준의 네 가지 요인이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이들이 세운 가설은 ① ‘탈세에

대한 제재가 심하다고 인식되면 탈세는 감소할 것이다' ② '적발확률이 높다고 인식되면 탈세는 감소할 것이다' ③ '정부와 납세자의 관계에서 자신이 다른 납세자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 탈세는 증가할 것이다' 세 가지 이다.

가설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① 제재의 정도에 대한 인식과 조세저항률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② 적발확률에 대한 인식과 조세저항률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③ 임금 및 연금소득비율은 조세저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납세자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탈세행위자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특히 조세를 회피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어 조세회피가 증가하게 된다.

조현연·이신남(2002)은 조세구조와 조세심리체계 하에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세구조의 복잡성, 과세당국, 세율, 준거집단, 조세윤리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특히 조세제도의 복잡성 요인과 과세당국과의 계약요인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준거집단의 납세에 대한 성실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낮은 것을 보였다. 그리고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이 과세당국과의 계약관계이고 끝으로 준거집단이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연구는 설문조사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넓어 이론적 연구나 실험연구에 비해서 제한이 적은 장점이 있다. 또한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방법은 자료수집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조사 연구방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조세회피 납세자들은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는 반면, 성실 납세자들은 실제 행동 이상으로 응답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설문항목이 구성되거나 응답자의 무응답·불성실응답이 발생하는 등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측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3) 실제자료 분석연구

실제자료 분석연구는 납세자가 제출한 보고 자료나 납세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조세회피 행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Clotfelter(1983)는 1969년 미국 국세청 자료인 TCMP⁴⁾를 이용하여 약 47,000명의 납세자를 분석하였다. 예정 소득액과 납세자들에 의해 실제 보고된 소득액과의 차액을 과소 신고된 소득으로 추정하였으며, 과소 신고가 세후소득과 한계세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Witte와 Woodbury(1985)는 4년간 미국 국세청 조세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규모가 작은 사업자, 중간계층의 근로소득자, 고소득계층의 자영업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납세이행에 대한 제재가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미국 국세청의 규제수단인 벌금, 세부조사확률, 조세회피의 기회 등으로 하고 종속변수는 연방소득세의 납부성실도 수준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① 형사상의 사기에 대한 금고선고의 엄격성은 성실납세 이행을 증가시켰고 ② 적발 가능성은 성실납세 이행을 증가시켰다. ③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납세자들은 비노동소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납세자들보다 조세규제에 대한 순응도가 높았다. ④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조세규제에 대한 동의수준이 낮았다. 또한 약 30,000\$의 소득까지 소득에 따라 납세 이행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lemrod(1985)는 미국 국세청의 납세자 신고서 중 23,111명을 표본추출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어떠한 단일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며, 한계세율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Clotfelter(1983)의 분석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였다.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자료 분석연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조세회피행태와 관련된 조세통계 자료의 미세분화, 개인 정보보호로 인한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4) TCMP (Tax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란 소득의 신고유형, 소득수준, 소득원천, 세무조사 등급,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수의 납세자를 표본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예정신고 소득과 세액 그리고 실제 신고소득과 세액 등을 집계하여 모집단의 납세이행율과 조세회피율을 추정하여 작성한 표이다.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자료에 근거한 연구가 있어야만 조세회피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현가능한 방안 마련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세회피의 한 형태인 조세채납 통계를 토대로 국세채납 행태의 특성을 기술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방법 및 연구자
이론적 분석	경제학적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학적 모형에서는 납세자를 기대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경제인이라는 가정 하에 조세회피는 납세자 개인의 최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보는 접근방법 - Allingham과 Sandmo(1972), Srinivasan(1973), Yitzhaki(1974), Christiansen(1980), Cross와 Shaw(1981), Cowell(1985) 등
	사회 심리학적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성, 납세의식 등의 사회심리학적 변수들이 조세 회피에 영향을 준다고 접근하는 방법 - Schmolders(1959), Mueller(1963), Strumpel(1969), Lewis(1979) 등
실증적 분석	실험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연구의 경우는 Allingham과 Sandmo(1972)의 조세회피 모형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입증 - Friedland과 Maital, Rutenberg(1978), Spicer와 Becker(1980)
	현장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연구는 연구목적에 맞게 설계를 함으로써 표본의 선정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분석 - Vogel(1974), Spicer와 Lundstedt(1976), 조현연·이신남(2002)
	실증자료 분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자료 분석연구는 납세자가 제출한 보고 자료나 납세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조세회피 행태를 파악 - Clotfelter(1983), Witte와 Woodbury(1985), Slemrod(1985)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업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할 뿐 실제자료 분석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고 이는 조세회피행태와 관련된 조세통계 자료의 미세분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 -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자료에 근거한 연구가 있어야만 조세회피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현가능한 방안 마련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 -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세회피의 한 형태인 조세체납 통계를 토대로 조세체납 행태의 특성을 기술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제 3 장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론

제 1 절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사회변수를 토대로 국세 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가 무엇인지 다음의 가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지역별 국세체납

(1) 소득수준과 국세체납의 관계

조세회피와 소득수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는 연구결과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Srinivasan(1973)은 적발확률이 일정하면 누진세제하에서 납세자의 실제소득이 증가할수록 과소신고 소득의 비율이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Mork(1975)도 고소득계층일수록 과소신고 소득의 비율이 크다고 하며 Srinivasan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Spicer와 Lundstedt(1976)는 가구당 소득과 조세저항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세율체계가 누진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는 납세규모가 더 큰 만큼 체납의 유인 또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 :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2) 경제상황과 국세체납의 관계

가설1에서 논의한 소득수준과 유사한 변수로서 지역의 경제상황이 있다. 지역별 소득수준 외에 지역의 경제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과 국세체납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소득수준과 조세회피관련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납세자는 조세납부를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국세체납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가설 2 :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3)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국세체납의 관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가 용이한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무신고, 과소신고 등의 방법을 통한 조세회피 행태를 많이 보인다⁵⁾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포착이 잘 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탈세를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적발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발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적발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국세체납의 관련성을 논의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적발가능성이란 과세당국이 납세회피자의 조세회피사실을 발견하여 과소 납부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적발가능성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iedland(1982)는 적발가능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감소하는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Singh(1973)는 일정한 가산세를 하에서는 적발가능성이 높을수록 과소 신고비율이 낮아진다고 하면서 적발확률 증가의 조세회피 억제효과를 주장하였다. 연구결과들을 볼 때 적발가능성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적발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자의 회피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세당국이 과소 납부된 세액과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므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행태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연구결과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 :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5) 정규언·오운택(2005) “자영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6권 제3호 p7-28

(4) 고용과 국세체납의 관계

국세통계변수 중 고용지표는 지역의 경제상황 뿐 아니라 고용자인 법인의 소득 수준, 피고용자인 개인납세자의 소득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조세부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가장 높으므로 두 조세와 관련이 있는 고용지표는 조세 체납연구에서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는 변수이다. 그러므로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과 체납발생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논의하도록 한다.

가설 4 : “지역별 고용이 체납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5) 공공혜택의 수준과 국세체납의 관계

지역별 공공혜택수준이 높은 경우 납세자들은 이를 조세납부에 따른 혜택이라고 인식하고 납세 성실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납세성실도가 높다면 납세자들은 조세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이므로 공공혜택수준은 조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통계상 공공혜택수준 지표들과 체납발생액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설 5 : “공공혜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2. 세목별 국세체납 - 세율과 국세체납의 관계

조세회피와 세율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조세회피와 세율은 관계가 불확실하다거나, 세율이 증가하면 조세회피 정도가 감소하는 부(-)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본다.

① Allingham·Sandmo(1972)는 세율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연구하였는데 가산세가 미신고소득에 부과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세율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② Srinivasan(1973)은 세율구조가 누진적인 경우 조세회피를 유발하기 쉬운 반면, 역진적인 경우는 조세회피 정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③ Yitzhaki(1974)는 조세회피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면 세율의 조세회피에 대한 영향력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세율이 증가했을 때 조세회피의 증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없어지고 세율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부(-)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음으로 세율이 증가하면 조세회피 정도가 증가하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본다.

Clotfelter(1983)는 실제 개인들의 신고서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와 한계세율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소득수준별로 모두 한계세율과 조세회피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세율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누진적 구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Clotfelter(1983)와 Srinivasan(1973)의 연구결과처럼 양자는 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율과 조세체납의 관계에서도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체납 행태가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6 : “세율이 높을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제 2 절 연구방법론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소득수준

소득수준은 소득의 범주에 따라 개인의 소득, 가계의 소득, 지역의 소득, 국가의 소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소득범주 하에서 연구대상 및 취지에 맞게 소득수준 변수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조세회피 관련 연구들은 개별납세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개인의 소득을 측정하였고, 조세체납 관련 연구들은 조세체납 규모자체에 관심이 있었을 뿐 소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가 전체의 국세체납이고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체납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측정해야 할 소득범주는 지역별 소득수준이 된다.

지역별 소득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일정기간 동안의 해당 지역 총생산액인 지역내 총생산(GRDP⁶⁾)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사용한다.

(2) 경제상황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납세자가 조세납부를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체납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통계청 국세통계에서 경제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제시된 변수로는 대표적으로 부도업체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도업체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해당할 것이므로 두 변수와 체납발생액과의 관계 측정을 통해 지역별 경제상황이 국세체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6) 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시·도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시·도단위의 종합경제지표.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우리나라 통계청은 1985년 이후 GRDP를 작성해왔으나 지역감정심화 등의 우려로 공개를 미루어오다 1993년부터 발표하기 시작.

(3) 비임금근로자 비율

해당 분석에서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지역별 국세체납발생액의 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4) 고용

통계청 국세통계에서 고용을 나타내기 위해 제시한 고용지표에는 ① 대표적으로 실업률⁷⁾이 있고 ② 실업률을 보완하기 위한 지표로서 고용률⁸⁾과 경제활동 참가율⁹⁾이 있다. 또한 ③ 최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표로서 장애인 고용률¹⁰⁾이 있다. 해당분석에서는 고용지표로서 실업률, 고용률·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고용률과 국세체납액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5) 공공혜택 수준

통계청 국가통계에서 공공혜택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지표로는 ① 사회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② 여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 체육시설 수 ③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천 명당 사설학원 수가 있다. 해당 분석에서는 이러한 변수들과 체납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6) 세율

국세 중 세율변화가 있는 대표적인 세목으로서 ① 소득세율의 변화 ② 법인세율의 변화와 체납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
- 7) 실업률(unemployment rate)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로서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8)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경제활동인구와 비(非)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노동법상 최저 근로연령인 만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인구비율이라고도 한다.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100
- 9) 경제활동참가율은 만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 100
- 10) 장애인 고용률(Employment rate of disabled workers)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앞서 논의한 분석별 측정변수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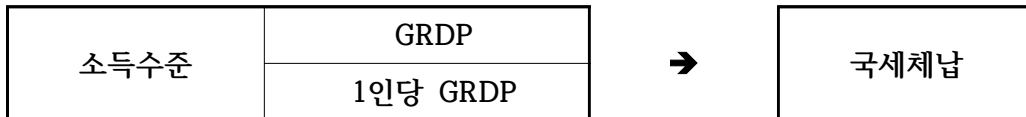
<표 7> 분석별 측정 변수 요약

	측정변수
소득수준	GRDP : 해당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
	1인당 GRDP : 해당 지역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경제상황	부도업체수 : 해당 지역의 부도업체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해당 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수
고용	실업율 : 해당 지역의 실업율
	고용율 : 해당 지역의 고용율
	경제활동 참가율 :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고용율 :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율
공공혜택수준	사회보장수준 :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여가·문화 수준 :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 체육시설 수
	교육여건 :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세율	소득세율 : 소득세율의 변화
	법인세율 : 법인세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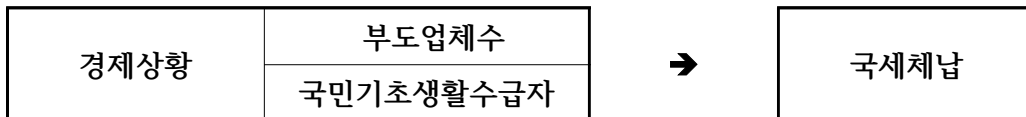
2. 연구모형 설정

(1) 지역별 국세체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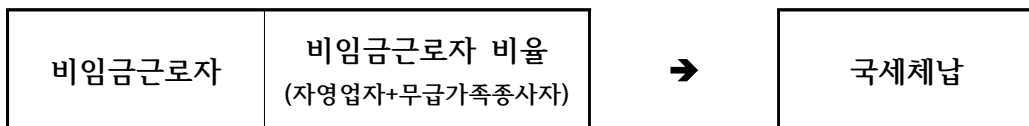
가설 1 :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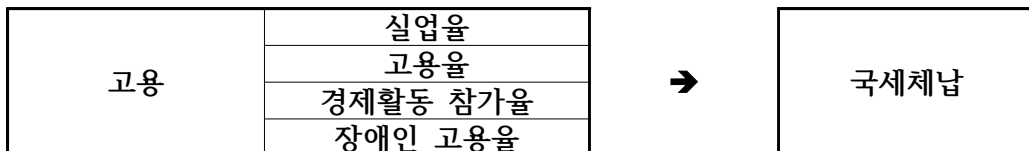
가설 2 :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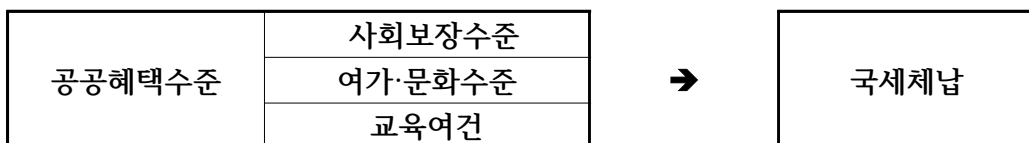
가설 3 :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가설 4 : “지역별 고용이 체납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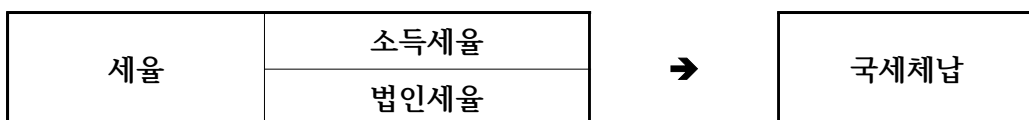


가설 5 : “공공혜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2) 세목별 국세체납

가설 6 : “세율이 높을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제 4 장 국세체납 기술통계

분석대상인 국세체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① 최근 4개년 간 연도별 국세체납 통계 ② 월별 국세체납 통계 ③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별 국세체납 통계 ④ 국세 세목별 국세체납 통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 1 절 연도별 국세체납 통계

1. 연도별 변화

최근 4년 간 국세체납 현황은 아래의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① 발생건수 측면에서 2011년에는 296만 건이 발생하였고 2012년에는 전년대비 20만 건 이상 증가한 319만 건의 체납이 발생하였다. 2013년에도 전년대비 약 20만 건 정도 증가하여 337만 건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은 7천 건 정도 감소한 336만 건의 체납이 발생하였다. ② 체납발생금액 측면에서는 2013년 체납발생액이 19.3조원으로 전년대비 4천억 정도 감소하였으나 2011년(18.4조원)부터 2014년(20.2조)까지 체납발생액은 증가추세에 있다.

<표 8> 연도별 국세체납 현황

구분	당해연도 발생액		체납발생총액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2011년	2,964,386	184,129	4,349,609	233,386
2012년	3,192,704	197,457	4,719,944	252,058
2013년	3,374,199	193,329	4,874,037	252,418
2014년	3,367,374	202,532	4,963,057	267,932

2. 정권변화에 따른 국세체납 변화

정권의 변화는 국가의 경제, 행정, 복지 등 많은 부문의 정책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국세체납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의 정권변화 시기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서 현 정부로 바뀐 시점인 2013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권변화 전후인 2011~2012년의 국세체납과 2013~2014년의 국세체납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위의 <표 8>에 제시된 연도별 국세체납 통계를 살펴보면, 정권변화 시점(2013년)을 기준으로 ① 국세체납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약 20만 건 증가하여 337만 건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2012년 발생건수의 전년대비 증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② 국세체납 발생금액을 보더라도 2013년(19.3조)과 2014년(20.2조) 조세체납 발생액은 2012년 발생액(19.7조) 대비 증감이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 분석을 근거로 볼 때, 정권의 변화로 인해 국세체납 발생에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권변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에서는 국세체납 정리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세무서별 국세체납정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파악·비교하고 있으므로 향후 2015년, 2016년 통계자료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2 절 월별 국세채납 통계

1. 월별 채납발생 현황

2011년~2014년 월별 채납발생 현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2011~2014년 월별 채납발생 현황

	당월채납		채납발생총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2,964,386	184,129	4,349,609	233,386
1월	236,097	23,241	1,621,320	72,498
2월	105,740	11,837	1,561,039	74,986
3월	76,910	8,943	1,527,004	76,636
4월	727,447	34,167	1,987,114	87,126
5월	83,429	6,883	1,861,206	80,451
6월	124,477	9,071	1,733,250	77,400
7월	155,088	15,837	1,551,823	71,290
8월	85,347	10,284	1,487,379	71,009
9월	225,309	12,864	1,570,753	73,050
10월	706,321	28,418	1,987,724	80,582
11월	117,845	9,373	1,875,924	75,435
12월	320,376	13,211	1,809,623	68,160
2012년	3,192,704	197,457	4,719,944	252,058
1월	236,698	23,395	1,763,938	77,996
2월	123,395	12,023	1,688,169	81,185
3월	92,029	12,507	1,648,212	86,115
4월	781,130	32,106	2,124,997	92,956
5월	95,193	9,979	1,965,586	86,725
6월	127,530	10,369	1,780,425	81,239
7월	152,120	16,872	1,570,550	76,438
8월	87,556	11,251	1,457,274	75,449
9월	251,622	13,041	1,537,655	74,964
10월	784,376	31,459	2,034,346	89,334
11월	112,739	9,844	1,864,067	81,684
12월	348,316	14,611	1,797,629	72,853

	당월체납		체납발생총액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374,199	193,329	4,874,037	252,418
1월	250,320	25,679	1,750,158	84,768
2월	112,973	9,710	1,664,778	85,781
3월	91,586	9,750	1,639,681	89,315
4월	846,088	37,737	2,184,137	102,813
5월	98,171	8,401	1,993,290	93,274
6월	141,458	10,495	1,715,346	83,389
7월	156,328	14,224	1,591,107	80,815
8월	77,308	8,146	1,458,211	76,802
9월	259,051	9,357	1,546,408	74,843
10월	829,057	33,606	2,150,286	98,328
11월	124,498	9,499	1,935,044	87,555
12월	387,361	16,725	1,938,586	84,133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367,374	202,532	4,963,057	267,932
1월	230,113	26,280	1,825,796	91,680
2월	119,127	13,671	1,739,999	96,417
3월	90,232	10,378	1,692,129	98,496
4월	809,759	35,584	2,229,038	111,771
5월	108,937	9,195	2,033,661	100,421
6월	161,962	12,002	1,847,736	90,962
7월	181,716	16,593	1,700,528	89,177
8월	117,801	10,356	1,579,801	85,995
9월	234,036	10,200	1,604,862	84,671
10월	810,086	31,026	2,182,042	101,852
11월	136,569	8,430	2,010,553	93,395
12월	367,036	18,817	1,989,450	93,947

월별 체납발생액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4월과 10월에 체납발생건수와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연도가 아닌 매년 동일한 월에 체납발생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월별 체납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그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월별 세무일정 검토를 통해 4월과 10월의 체납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2. 월별 세무 일정에 따른 국세채납 변화

(1) 월별 주요 세무일정

앞서 세목별 채납발생액 분석에서 파악한 바와 채납발생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므로 많은 세무일정 중 채납비중이 높은 세목들과 관련된 월별 주요 세무일정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월별 주요 세무일정

3월 31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4월 25일	1기(1~3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¹¹⁾ 납부
5월 31일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6월 30일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0월 25일	2기(7~9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 월별 세무일정과 채납발생의 관계 분석

채납발생이 4월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① 3월 31일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4월 1일부터 채납으로 추정되므로 4월 채납액에 해당 ② 4월 25일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고 기한만료 다음날부터 채납으로 추정되므로 4월 채납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월에 채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① 9월 30일이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10월 1일부터 채납으로 추정되므로 10월 채납액에 해당 ② 10월 25일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고 기한만료 다음날부터 채납으로 추정되므로 10월 채납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③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무신고납부고지 시점이 10월인 경우가 많아 무신고납부고지에 대한 채납발생도 10월 채납액으로 추정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 (제1기 :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 :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으로 정하고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석결과 월별 체납발생액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월별 주요 세무일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체납발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월과 10월에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납부기간이 있는데 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들이 편의상 확정신고 납부기간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체납발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인 4월과 10월에 체납발생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주요세수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체납발생 건수 및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세무일정상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제 3 절 지역별 국세채납 통계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 국세채납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표 11>과 같고, 이하에서는 지역 간 채납발생 차이를 연도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한다.

<표 11> 지역별 국세채납 현황

구 분	2011년 발생액		2012년 발생액		2013년 발생액		2014년 발생액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전국	2,964,386	184,129	3,192,704	197,457	3,374,199	193,329	3,367,374	202,532
서울	754,331	63,935	810,281	63,282	829,460	60,045	823,675	59,919
인천	214,327	12,994	227,351	12,995	240,209	13,049	179,700	11,151
경기	781,811	50,002	862,556	56,753	912,929	55,230	936,799	60,434
강원	78,003	3,090	83,484	3,188	85,970	3,004	86,472	3,427
대전	77,796	2,982	87,124	4,045	86,823	4,038	89,572	4,178
충북	78,237	3,635	85,866	4,551	92,045	3,993	94,482	4,400
충남	110,732	6,201	122,464	7,164	125,799	6,445	129,454	6,697
광주	71,442	3,472	73,003	3,566	76,684	3,367	80,568	3,579
전북	74,733	2,941	77,211	3,256	81,167	3,283	85,138	3,785
전남	64,785	2,688	66,747	3,183	71,550	3,166	74,781	3,094
대구	113,834	5,517	118,722	5,431	134,732	5,785	146,391	7,030
경북	109,271	4,894	112,146	6,592	131,572	6,167	147,521	7,148
부산	196,705	10,003	209,754	10,442	223,482	11,215	218,387	11,403
울산	55,456	2,962	62,156	3,239	66,175	3,868	66,838	3,906
경남	152,350	7,845	162,043	8,585	179,249	9,406	172,602	10,778
제주	30,573	968	31,796	1,185	36,353	1,268	34,994	1,603

1. 2011년 지역별 국세체납

아래의 <표 12>에서 제시된 2011년 국세체납 발생액을 보면 서울이 6.3조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지역이 5조 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11조 원 이상으로 전체 체납발생액(18.4조 원)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 체납 발생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968억 원의 체납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체납발생액의 0.5%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세체납발생액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2011년 지역별 국세체납 현황

2011년	당해연도 발생액		체납발생총액		당해연도 발생액 순위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지역별	2,964,386	184,129	4,349,609	233,386	.
서울	754,331	63,935	1,192,371	84,332	1
인천	214,327	12,994	333,058	16,840	3
경기	781,811	50,002	1,188,865	63,872	2
강원	78,003	3,090	106,461	3,763	11
대전	77,796	2,982	103,783	3,914	12
충북	78,237	3,635	106,358	4,357	9
충남	110,732	6,201	140,830	7,101	6
광주	71,442	3,472	94,952	4,483	10
전북	74,733	2,941	100,614	3,607	14
전남	64,785	2,688	84,421	3,261	15
대구	113,834	5,517	158,140	6,583	7
경북	109,271	4,894	143,908	5,741	8
부산	196,705	10,003	272,626	11,655	4
울산	55,456	2,962	75,315	3,428	13
경남	152,350	7,845	205,989	9,259	5
제주	30,573	968	41,918	1,190	16

2. 2012년 지역별 국세체납

아래의 <표 13>에서 제시된 2012년 국세체납 발생액을 보면 서울이 6.3조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지역이 5.6조 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12조 원 이상으로 전체 체납발생액(19.7조 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체납 발생액순위를 전년도(2011년)와 비교하면 체납순위가 높아진 지역은 대전(12위→10위) 전북(14위→12위) 경북(8위→7위)이고, 체납순위가 낮아진 지역은 강원(11위→14위) 광주(10위→11위) 대구(7위→8위)이다.

<표 13> 2012년 지역별 국세체납 현황

2012년	당해연도 발생액		체납발생총액		당해연도 발생액 순위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2012년	2011년
지역별	3,192,704	197,457	4,719,944	252,058	.	.
서울	810,281	63,282	1,280,630	86,813	1	1
인천	227,351	12,995	354,933	17,009	3	3
경기	862,556	56,753	1,314,003	71,762	2	2
강원	83,484	3,188	115,406	3,896	14	11
대전	87,124	4,045	118,096	4,885	10	12
충북	85,866	4,551	116,955	5,253	9	9
충남	122,464	7,164	164,569	8,469	6	6
광주	73,003	3,566	100,173	4,479	11	10
전북	77,211	3,256	107,880	3,988	12	14
전남	66,747	3,183	89,948	3,772	15	15
대구	118,722	5,431	165,827	6,756	8	7
경북	112,146	6,592	150,077	7,495	7	8
부산	209,754	10,442	289,490	12,239	4	4
울산	62,156	3,239	85,208	3,741	13	13
경남	162,043	8,585	222,913	10,108	5	5
제주	31,796	1,185	43,836	1,393	16	16

3. 2013년 지역별 국세체납

아래의 <표 14>에서 제시된 2013년 국세체납 발생액을 보면 서울이 6조 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많고 경기지역이 5.5조 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약 11.5조 원으로 전체 체납발생액(19.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감소(약 59%)하였다. 국세체납 발생액순위를 전년도(2012년)와 비교하면 체납순위가 높아진 지역은 대전(10위→9위) 전남(15위→14위) 울산(13위→11위)이고, 체납순위가 낮아진 지역은 강원(14위→15위) 충북(9위→10위) 광주(11위→12위) 전북(12위→13위)이다.

<표 14> 2013년 지역별 국세체납 현황

2013년	당해연도 발생액		체납발생총액		당해연도 발생액 순위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2013년	2012년
지역별	3,374,199	193,329	4,874,037	252,418	.	.
서울	829,460	60,045	1,270,597	84,478	1	1
인천	240,209	13,049	364,105	17,019	3	3
경기	912,929	55,230	1,375,666	72,284	2	2
강원	85,970	3,004	117,417	3,741	15	14
대전	86,823	4,038	121,510	4,962	9	10
충북	92,045	3,993	123,838	4,863	10	9
충남	125,799	6,445	170,679	7,856	6	6
광주	76,684	3,367	101,570	4,213	12	11
전북	81,167	3,283	109,807	4,049	13	12
전남	71,550	3,166	92,685	3,871	14	15
대구	134,732	5,785	173,908	7,023	8	8
경북	131,572	6,167	164,242	7,223	7	7
부산	223,482	11,215	306,685	13,397	4	4
울산	66,175	3,868	89,883	4,583	11	13
경남	179,249	9,406	242,238	11,283	5	5
제주	36,353	1,268	49,207	1,573	16	16

4. 2014년 지역별 국세체납

아래의 <표 15>에서 제시된 2014년 국세체납 발생액을 보면 경기도가 6조 원(전년 대비 5천억 원 증가)으로 서울을 제치고 체납액이 가장 많고 서울지역이 5.9조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약 12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전체 체납발생액(20.2조 원)의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한(약 59%) 수준이다. 국세체납 발생액순위를 전년도(2013년)와 비교하면 체납순위가 높아진 지역은 경기(2위→1위) 강원(15위→14위) 대전(10위→9위) 충북(10위→9위) 전북(13위→12위) 대구(8위→7위) 경북(7위→6위) 부산(4위→3위)이고, 체납순위가 낮아진 지역은 서울(1위→2위) 인천(3위→4위) 대전(9위→10위) 충남(6위→8위) 광주(12위→13위) 전남(14위→15위)이다. 2014년 체납액 순위의 변동이 최근 4년(2011~2014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5> 2014년 지역별 국세체납 현황

2014년	당해연도 발생액		체납발생총액		당해연도 발생액 순위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2014년	2013년
지역별	3,367,374	202,532	4,963,057	267,932	·	·
서울	823,675	59,919	1,272,233	86,156	2	1
인천	179,700	11,151	310,268	15,752	4	3
경기	936,799	60,434	1,417,888	78,868	1	2
강원	86,472	3,427	118,161	4,163	14	15
대전	89,572	4,178	123,058	5,134	10	9
충북	94,482	4,400	127,730	5,450	9	10
충남	129,454	6,697	179,220	8,304	8	6
광주	80,568	3,579	108,602	4,525	13	12
전북	85,138	3,785	115,286	4,695	12	13
전남	74,781	3,094	96,981	3,880	15	14
대구	146,391	7,030	196,123	8,347	7	8
경북	147,521	7,148	191,515	8,480	6	7
부산	218,387	11,403	311,823	14,184	3	4
울산	66,838	3,906	95,997	4,830	11	11
경남	172,602	10,778	247,098	13,204	5	5
제주	34,994	1,603	51,074	1,960	16	16

제 4 절 세목별 국세체납 통계

2011~2014년 국세체납을 세목별로 <표 16>과 <표 17>에서 제시하고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1. 2011~2012년 세목별 국세체납

2011년 국세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36.4%), 과년도 수입과 기타 제외 시 소득세(22.7%) 법인세(6.4%) 상속증여세(3.6%) 순으로 체납액이 많다.

<표 16> 2011~2012년 세목별 국세체납 현황

2011년	당해연도 발생액		체납발생총액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세목별	2,964,386	184,129	4,349,609	233,386
소득세	826,645	41,802	826,645	41,802
법인세	69,131	11,862	69,131	11,862
상속·증여세	12,236	6,629	12,236	6,629
부가가치세	1,533,156	67,070	1,533,156	67,070
과년도 수입 ¹²⁾	409,027	29,097	1,794,250	78,354
기타	114,191	27,669	114,191	27,669
2012년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세목별	3,192,704	197,457	4,719,944	252,058
소득세	931,077	50,430	931,077	50,430
법인세	72,807	12,713	72,807	12,713
상속·증여세	8,054	7,407	8,054	7,407
부가가치세	1,650,506	71,360	1,650,506	71,360
과년도 수입	399,410	26,463	1,926,650	81,064
기타	130,850	29,084	130,850	29,084

12) 과년도수입[過年度收入]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을 말한다. 즉, 어느 연도를 정해서 수납해야 되는 것으로 고지를 했으나, 당해 연도의 출납정리 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한 수입이 그 후에 납입되었을 때에는 그 세입이 본래 소속할 연도의 출납은 이미 완결되었으므로 현금영수일에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를 과년도수입이라 한다. (회계·세무 용어사전)

2012년 국세채납액의 경우에도 과년도 수입과 기타 제외 시 부가가치세(36.1%) 소득세(25.5%) 법인세(6.4%) 상속증여세(3.7%) 순으로 채납액이 많다. 특히, 소득세의 채납발생액은 전년대비 증가액이 8,6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2. 2013~2014년 세목별 국세채납

2013년 국세채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38.5%), 과년도 수입과 기타 제외 시 소득세(20.8%) 법인세(6%) 상속증여세(3%) 순으로 채납액이 많다. 그리고 소득세 채납발생액은 전년대비 1조 원 이상 감소하여 변화폭이 가장 크고 부가가치세 채납액은 전년대비 300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2014년 국세채납액의 경우에도 과년도 수입과 기타 제외 시 부가가치세(36.4%) 소득세(22.2%) 법인세(5.8%) 상속증여세(2.3%) 순으로 채납액이 많다. 특히, 소득세의 채납발생액은 전년대비 4,700억 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크다.

<표 17> 2013~2014년 세목별 국세채납 현황

	당해연도 발생액		채납발생총액	
2013년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세목별	3,374,199	193,329	4,874,037	252,418
소득세	948,636	40,398	948,636	40,398
법인세	72,290	11,760	72,290	11,760
상속·증여세	7,284	5,970	7,284	5,970
부가가치세	1,749,459	74,484	1,749,459	74,484
과년도 수입	454,544	29,030	1,954,382	88,119
기타	141,986	31,687	141,986	31,687
2014년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세목별	3,367,374	202,532	4,963,057	267,932
소득세	960,826	45,121	960,826	45,121
법인세	75,233	11,902	75,233	11,902
상속·증여세	8,363	4,726	8,363	4,726
부가가치세	1,706,492	73,854	1,706,492	73,854
과년도 수입	478,558	29,440	2,074,241	94,840
기타	137,902	37,489	137,902	37,489

제 5 장 국세체납의 요인분석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① 지역별 국세체납액에 사회통계 변수가 미치는 영향 ② 세목별 국세체납액에 세율개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 1 절 지역별 국세체납 분석

1. 지역별 소득이 국세체납에 미치는 영향

(1) 변수의 설정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세율체계가 누진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는 납세규모가 더 큰 만큼 조세체납의 유인 또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지역별 소득수준은 지역내 총생산(GRDP)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으로 측정한다.

(2) 지역내 총생산과 조세체납 통계 분석

지역내 총생산과 체납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18>과 같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지역별 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당해 연도 체납발생액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 총생산 순위와 체납발생액 순위가 5단계 이상 차이나는 예외지역은 매년 차이가 있지만 울산, 전남, 인천이 대표적이다.

울산과 전남은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순위이지만 체납발생액의 순위가 낮은 지역으로서 지역내 총생산 수준에 비해 체납발생액이 적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의 경우는 반대로 지역내 총생산 순위가 낮는데 체납발생순위가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내 총생산 수준에 비해 조세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표 18> 2011~2014년 지역내 총생산 및 체납발생 현황

구분	GRDP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1년	GRDP(억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3,038,130	1	754,331	63,935	1
경기	2,761,550	2	781,811	50,002	2
충남	918,160	3	110,732	6,201	6
경남	912,330	4	152,350	7,845	5
경북	822,760	5	109,271	4,894	8
울산	687,480	6	55,456	2,962	13
부산	666,480	7	196,705	10,003	4
전남	626,890	8	64,785	2,688	15
인천	618,540	9	214,327	12,994	3
충북	424,890	10	78,237	3,635	9
대구	414,480	11	113,834	5,517	7
전북	399,600	12	74,733	2,941	14
강원	324,380	13	78,003	3,090	11
대전	296,840	14	77,796	2,982	12
광주	277,890	15	71,442	3,472	10
제주	118,470	16	30,573	968	16
2012년	GRDP(억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3,134,790	1	810,281	63,282	1
경기	2,881,470	2	862,556	56,753	2
경남	956,350	3	162,043	8,585	5
충남	953,080	4	122,464	7,164	6
경북	854,010	5	112,146	6,592	7
울산	707,830	6	62,156	3,239	13
부산	679,990	7	209,754	10,442	4
전남	646,420	8	66,747	3,183	15
인천	622,080	9	227,351	12,995	3
충북	436,280	10	85,866	4,551	9
대구	430,210	11	118,722	5,431	8
전북	404,320	12	77,211	3,256	12
강원	338,530	13	83,484	3,188	14
대전	308,840	14	87,124	4,045	10
광주	289,140	15	73,003	3,566	11
제주	127,070	16	31,796	1,185	16

구분	GRDP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3년	GRDP(억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3,186,070	1	829,460	60,045	1
경기	3,136,710	2	912,929	55,230	2
경남	996,190	3	179,249	9,406	5
충남	991,540	4	125,799	6,445	6
경북	891,320	5	131,572	6,167	7
부산	703,380	6	223,482	11,215	4
울산	683,480	7	66,175	3,868	11
인천	646,540	8	240,209	13,049	3
전남	622,890	9	71,550	3,166	14
충북	474,020	10	92,045	3,993	10
대구	447,540	11	134,732	5,785	8
전북	425,130	12	81,167	3,283	13
강원	353,570	13	85,970	3,004	15
대전	314,560	14	86,823	4,038	9
광주	297,630	15	76,684	3,367	12
제주	131,980	16	36,353	1,268	16
2014년	GRDP(억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경기	3,295,590	1	936,799	60,434	1
서울	3,286,610	2	823,675	59,919	2
충남세종	1,050,020	3	129,454	6,697	8
경남	1,010,280	4	172,602	10,778	5
경북	926,970	5	147,521	7,148	6
부산	736,740	6	218,387	11,403	3
인천	695,010	7	179,700	11,151	4
울산	670,180	8	66,838	3,906	11
전남	624,570	9	74,781	3,094	15
충북	497,910	10	94,482	4,400	9
대구	465,240	11	146,391	7,030	7
전북	442,430	12	85,138	3,785	12
강원	371,700	13	86,472	3,427	14
대전	327,990	14	89,572	4,178	10
광주	312,950	15	80,568	3,579	13
제주	140,870	16	34,994	1,603	16

※ 음영표시 : 전체적인 경향성과 달리 두 변수 간 순위차이가 큰 지역

(3) 1인당 지역내 총생산과 국세체납 통계 분석

1인당 지역내 총생산과 체납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19>와 같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1인당 지역별 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당해 연도 체납발생액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지역별 총생산과 체납발생액의 관계 분석과 비교해보면 1인당 지역별 총생산 순위와 체납발생액 순위 차이가 큰 지역이 많고 그 차이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울산, 전남, 인천, 부산, 대구 이다.

울산과 전남은 지역내 총생산과의 관계분석과 동일하게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순위가 높지만 체납발생액의 순위가 낮은 지역으로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수준에 비해 체납발생액이 적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 부산, 대구의 경우는 반대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순위가 낮는데 체납발생액 순위가 높은 지역으로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수준에 비해 조세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표 19> 2011~2014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및 체납발생 현황

구분	1인당 GRDP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1년	1인당 GRDP (백만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울산	62.24	1	55,456	2,962	13
충남	43.55	2	110,732	6,201	6
전남	35.41	3	64,785	2,688	15
경북	31.22	4	109,271	4,894	8
서울	30.26	5	754,331	63,935	1
경남	28.24	6	152,350	7,845	5
충북	27.62	7	78,237	3,635	9
경기	23.39	8	781,811	50,002	2
인천	22.54	9	214,327	12,994	3
전북	22.21	10	74,733	2,941	14
강원	21.72	11	78,003	3,090	11
제주	21.43	12	30,573	968	16
대전	19.49	13	77,796	2,982	12
부산	19.28	14	196,705	10,003	4
광주	18.49	15	71,442	3,472	10
대구	16.76	16	113,834	5,517	7

구분	1인당 GRDP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2년	1인당 GRDP (백만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울산	63.40	1	62,156	3,239	13
충남	44.56	2	122,464	7,164	6
전남	36.58	3	66,747	3,183	15
경북	32.34	4	112,146	6,592	7
서울	31.40	5	810,281	63,282	1
경남	29.45	6	162,043	8,585	5
충북	28.15	7	85,866	4,551	9
경기	24.08	8	862,556	56,753	2
제주	22.69	9	31,796	1,185	16
강원	22.59	10	83,484	3,188	14
전북	22.45	11	77,211	3,256	12
인천	22.33	12	227,351	12,995	3
대전	20.13	13	87,124	4,045	10
부산	19.79	14	209,754	10,442	4
광주	19.16	15	73,003	3,566	11
대구	17.42	16	118,722	5,431	8
2013년	1인당 GRDP (백만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울산	60.56	1	66,175	3,868	11
충남	45.63	2	125,799	6,445	6
전남	35.37	3	71,550	3,166	14
경북	33.75	4	131,572	6,167	7
서울	32.10	5	829,460	60,045	1
경남	30.61	6	179,249	9,406	5
충북	30.41	7	92,045	3,993	10
경기	25.84	8	912,929	55,230	2
전북	23.64	9	81,167	3,283	13
강원	23.58	10	85,970	3,004	15
제주	23.17	11	36,353	1,268	16
인천	22.88	12	240,209	13,049	3
부산	20.53	13	223,482	11,215	4
대전	20.42	14	86,823	4,038	9
광주	19.66	15	76,684	3,367	12
대구	18.16	16	134,732	5,785	8

구분	1인당 GRDP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4년	1인당 GRDP (백만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울산	58.88	1	66,838	3,906	11
충남세종	47.60	2	129,454	6,697	8
전남	35.52	3	74,781	3,094	15
경북	35.11	4	147,521	7,148	6
서울	33.23	5	823,675	59,919	2
충북	31.81	6	94,482	4,400	9
경남	30.87	7	172,602	10,778	5
경기	26.84	8	936,799	60,434	1
강원	24.76	9	86,472	3,427	14
전북	24.62	10	85,138	3,785	12
인천	24.32	11	179,700	11,151	4
제주	24.24	12	34,994	1,603	16
부산	21.59	13	218,387	11,403	3
대전	21.22	14	89,572	4,178	10
광주	20.64	15	80,568	3,579	13
대구	18.91	16	146,391	7,030	7

(4) 분석 결과

분석결과 ①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②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일부 예외 지역이 존재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결과는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 및 소득이 많아 조세부담이 클수록 국세체납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결과 1 :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

①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②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2. 지역별 경제상황이 국세채납에 미치는 영향

(1) 변수의 설정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납세자가 조세납부를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채납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도업체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해당할 것이므로 두 변수와 채납발생액과의 관계 측정을 통해 지역별 경제상황이 국세채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지역별 부도업체수와 조세채납 통계 분석

지역별 부도업체수와 채납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20>과 같다.

<표 20> 2011~2014년 지역별 부도업체수 및 채납발생 현황

구분	부도업체수		당해연도 채납발생		
2011년	부도업체수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546	1	754,331	63,935	1
경기	153	2	781,811	50,002	2
부산	112	3	196,705	10,003	4
대구	97	4	113,834	5,517	7
광주	65	5	71,442	3,472	10
경남	65	6	152,350	7,845	5
인천	58	7	214,327	12,994	3
전북	53	8	74,733	2,941	14
대전	39	9	77,796	2,982	12
경북	32	10	109,271	4,894	8
전남	31	11	64,785	2,688	15
충북	25	12	78,237	3,635	9
강원	23	13	78,003	3,090	11
제주	22	14	30,573	968	16
충남	21	15	110,732	6,201	6
울산	17	16	55,456	2,962	13

구분	부도업체수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2년	부도업체수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432	1	810,281	63,282	1
경기	225	2	862,556	56,753	2
부산	94	3	209,754	10,442	4
경남	73	4	162,043	8,585	5
대구	59	5	118,722	5,431	8
광주	52	6	73,003	3,566	11
인천	46	7	227,351	12,995	3
전북	44	8	77,211	3,256	12
경북	37	9	112,146	6,592	7
대전	35	10	87,124	4,045	10
전남	33	11	66,747	3,183	15
강원	25	12	83,484	3,188	14
충남	25	13	122,464	7,164	6
충북	20	14	85,866	4,551	9
제주	19	15	31,796	1,185	16
울산	9	16	62,156	3,239	13
2013년	부도업체수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383	1	829,460	60,045	1
경기	158	2	912,929	55,230	2
부산	75	3	223,482	11,215	4
경남	66	4	179,249	9,406	5
대구	54	5	134,732	5,785	8
인천	47	6	240,209	13,049	3
광주	36	7	76,684	3,367	12
경북	32	8	131,572	6,167	7
전북	30	9	81,167	3,283	13
대전	23	10	86,823	4,038	9
강원	20	11	85,970	3,004	15
충남	20	12	125,799	6,445	6
제주	19	13	36,353	1,268	16
전남	18	14	71,550	3,166	14
충북	12	15	92,045	3,993	10
울산	8	16	66,175	3,868	11

구분	부도업체수		당해연도 채납발생		
2014년	부도업체수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293	1	823,675	59,919	2
경기	173	2	936,799	60,434	1
부산	63	3	218,387	11,403	3
대구	58	4	146,391	7,030	7
경남	40	5	172,602	10,778	5
전북	38	6	85,138	3,785	12
인천	33	7	179,700	11,151	4
광주	26	8	80,568	3,579	13
경북	23	9	147,521	7,148	6
대전	18	10	89,572	4,178	10
강원	15	11	86,472	3,427	14
전남	15	12	74,781	3,094	15
제주	14	13	34,994	1,603	16
충북	12	14	94,482	4,400	9
울산	11	15	66,838	3,906	11
충남세종	9	16	129,454	6,697	8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지역별 부도업체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채납발생액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부도업체수 순위와 채납발생액 순위가 5단계 이상 차이나는 지역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광주, 충남은 매년 5단계 이상 차이를 보이는 예외지역이다.

광주는 부도업체 순위가 높지만 채납발생액 순위는 낮은 지역으로서 부도업체수에 비해 채납발생이 적게 나타나는 지역인 반면, 충남은 부도업체수 순위가 낮지만 채납발생액 순위가 높은 지역으로서 부도업체수에 비해 채납발생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3) 지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세채납 통계 분석

지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채납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21>와 같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채납발생액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순위와 채납발생액 순위 차이가 많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전북, 전남, 인천이 있다.

전북과 전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순위가 높지만 채납발생액 순위가 낮은 지역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비해 채납발생액이 적은 지역이다. 반면 인천지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순위가 낮지만 채납발생액 순위가 높은 지역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비해 채납발생액이 많은 지역이다.

<표 21> 2011~2014년 지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채납발생 현황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당해연도 채납발생		
2011년	인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206,808	1	754,331	63,935	1
경기	199,335	2	781,811	50,002	2
부산	141,597	3	196,705	10,003	4
경북	113,990	4	109,271	4,894	8
대구	104,532	5	113,834	5,517	7
전북	103,085	6	74,733	2,941	14
경남	98,939	7	152,350	7,845	5
전남	96,503	8	64,785	2,688	15
인천	71,700	9	214,327	12,994	3
충남	66,884	10	110,732	6,201	6
강원	62,543	11	78,003	3,090	11
광주	62,482	12	71,442	3,472	10
충북	53,370	13	78,237	3,635	9
대전	46,549	14	77,796	2,982	12
제주	23,746	15	30,573	968	16
울산	17,191	16	55,456	2,962	13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2년	인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199,310	1	810,281	63,282	1
경기	192,170	2	862,556	56,753	2
부산	135,973	3	209,754	10,442	4
경북	105,193	4	112,146	6,592	7
대구	99,473	5	118,722	5,431	8
전북	95,656	6	77,211	3,256	12
경남	93,977	7	162,043	8,585	5
전남	87,670	8	66,747	3,183	15
인천	70,860	9	227,351	12,995	3
광주	60,684	10	73,003	3,566	11
강원	58,820	11	83,484	3,188	14
충남	58,363	12	122,464	7,164	6
충북	49,669	13	85,866	4,551	9
대전	44,992	14	87,124	4,045	10
제주	21,986	15	31,796	1,185	16
울산	15,804	16	62,156	3,239	13
2013년	인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201,958	1	829,460	60,045	1
경기	189,259	2	912,929	55,230	2
부산	130,835	3	223,482	11,215	4
경북	99,437	4	131,572	6,167	7
대구	96,803	5	134,732	5,785	8
전북	90,280	6	81,167	3,283	13
경남	89,622	7	179,249	9,406	5
전남	80,315	8	71,550	3,166	14
인천	70,984	9	240,209	13,049	3
광주	59,962	10	76,684	3,367	12
강원	56,184	11	85,970	3,004	15
충남	54,970	12	125,799	6,445	6
충북	46,372	13	92,045	3,993	10
대전	44,066	14	86,823	4,038	9
제주	21,187	15	36,353	1,268	16
울산	15,353	16	66,175	3,868	11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4년	인원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206,687	1	823,675	59,919	2
경기	189,400	2	936,799	60,434	1
부산	126,962	3	218,387	11,403	3
경북	95,609	4	147,521	7,148	6
대구	93,539	5	146,391	7,030	7
전북	87,008	6	85,138	3,785	12
경남	86,996	7	172,602	10,778	5
전남	75,501	8	74,781	3,094	15
인천	72,113	9	179,700	11,151	4
광주	59,598	10	80,568	3,579	13
충남세종	56,562	11	129,454	6,697	8
강원	54,841	12	86,472	3,427	14
충북	44,964	13	94,482	4,400	9
대전	43,469	14	89,572	4,178	10
제주	20,101	15	34,994	1,603	16
울산	15,363	16	66,838	3,906	11

(4) 분석 결과

분석결과 ① 부도업체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일부 예외 지역이 존재하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결과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조세납부를 부담으로 인식하여 체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또한 지역의 경제상황은 지역의 소득수준과 관련 있는 변수로 볼 수 있어, 결과 2는 앞서 분석한 결과 1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결과 2 :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

① 부도업체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3. 지역별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국세체납에 미치는 영향

(1) 변수의 설정

조세회피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조세회피의 적발가능성이 낮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득탈루가 용이한 자영업자들은 조세회피의 적발가능성이 낮으므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조세회피의 일종인 조세체납에 있어서도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체납발생액이 많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비임금근로자 비율(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과 체납발생액의 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2) 지역별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국세체납 통계 분석

지역별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체납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22>와 같고,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체납발생액 사이에는 유의미한 규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표 22> 2011~2014년 지역별 비임금근로자 비율 및 체납발생 현황

구분	비임금근로자 비율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1년	비율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전남	0.468	1	64,785	2,688	15
경북	0.404	2	109,271	4,894	8
전북	0.384	3	74,733	2,941	14
제주	0.378	4	30,573	968	16
충남	0.364	5	110,732	6,201	6
강원	0.339	6	78,003	3,090	11
경남	0.330	7	152,350	7,845	5
충북	0.327	8	78,237	3,635	9
대구	0.270	9	113,834	5,517	7
부산	0.267	10	196,705	10,003	4
광주	0.249	11	71,442	3,472	10
경기	0.244	12	781,811	50,002	2
인천	0.238	13	214,327	12,994	3
대전	0.237	14	77,796	2,982	12
서울	0.233	15	754,331	63,935	1
울산	0.195	16	55,456	2,962	13

구분	비임금근로자 비율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2년	비율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전남	0.480	1	66,747	3,183	15
경북	0.403	2	112,146	6,592	7
전북	0.384	3	77,211	3,256	12
제주	0.368	4	31,796	1,185	16
강원	0.360	5	83,484	3,188	14
충남	0.342	6	122,464	7,164	6
경남	0.334	7	162,043	8,585	5
충북	0.328	8	85,866	4,551	9
대구	0.287	9	118,722	5,431	8
부산	0.265	10	209,754	10,442	4
광주	0.253	11	73,003	3,566	11
경기	0.245	12	862,556	56,753	2
인천	0.240	13	227,351	12,995	3
대전	0.236	14	87,124	4,045	10
서울	0.226	15	810,281	63,282	1
울산	0.196	16	62,156	3,239	13
2013년	비율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전남	0.458	1	71,550	3,166	14
경북	0.405	2	131,572	6,167	7
제주	0.374	3	36,353	1,268	16
전북	0.355	4	81,167	3,283	13
강원	0.348	5	85,970	3,004	15
충남	0.337	6	125,799	6,445	6
경남	0.333	7	179,249	9,406	5
충북	0.327	8	92,045	3,993	10
대구	0.285	9	134,732	5,785	8
광주	0.270	10	76,684	3,367	12
부산	0.260	11	223,482	11,215	4
경기	0.232	12	912,929	55,230	2
대전	0.231	13	86,823	4,038	9
인천	0.230	14	240,209	13,049	3
서울	0.214	15	829,460	60,045	1
울산	0.190	16	66,175	3,868	11

구분	비임금근로자 비율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4년	비율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전남	0.440	1	74,781	3,094	15
경북	0.397	2	147,521	7,148	6
제주	0.354	3	34,994	1,603	16
전북	0.347	4	85,138	3,785	12
강원	0.338	5	86,472	3,427	14
충남세종	0.333	6	129,454	6,697	8
충북	0.322	7	94,482	4,400	9
경남	0.314	8	172,602	10,778	5
대구	0.267	9	146,391	7,030	7
광주	0.261	10	80,568	3,579	13
부산	0.253	11	218,387	11,403	3
대전	0.233	12	89,572	4,178	10
경기	0.229	13	936,799	60,434	1
인천	0.218	14	179,700	11,151	4
서울	0.216	15	823,675	59,919	2
울산	0.187	16	66,838	3,906	11

(3) 분석 결과

분석결과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합)비율과 체납발생액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인 적발가능성이 낮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의 예측과 다른 결과이다. 비임금근로자가 적발가능성이 낮은 경우 소득탈루, 과소신고 등의 행태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높지만, 고지된 과세처분에 대해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조세체납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므로 선행연구의 예측과 상충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과 3 :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국세체납액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4. 지역별 고용이 국세체납에 미치는 영향

(1) 변수의 설정

사회변수 중 고용지표는 지역의 경제상황 뿐 아니라 고용자인 법인의 소득수준, 피고용자인 개인납세자의 소득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조세부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가장 높으므로 두 조세와 관련이 있는 고용지표는 국세체납연구에서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는 변수이다.

고용지표에는 ① 대표적으로 실업률이 있고 ② 실업률을 보완하기 위한 지표로서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다. 또한 ③ 최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표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있다. 이하에서는 고용지표로서 실업률, 고용률·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고용률과 국세체납액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2) 지역별 실업률과 국세체납 통계 분석

지역별 실업률과 체납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23>과 같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체납발생액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실업률 순위와 체납발생액 순위가 5단계 이상 차이나는 예외지역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011~2014년 공통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역은 경남 하나 뿐이다.

대표적인 예외지역으로 경남은 실업률 순위가 낮음에도 체납발생액 순위가 높은 지역으로서 실업률에 비해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대전은 실업률 순위가 높지만 체납발생액이 낮은 지역으로서 실업률에 비해 체납이 적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표 23> 2011~2014년 지역별 실업률 및 체납발생 현황

구분	실업률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1년	실업률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인천	4.8	1	214,327	12,994	3
서울	4.6	2	754,331	63,935	1
대구	3.7	3	113,834	5,517	7
대전	3.6	4	77,796	2,982	12
부산	3.6	5	196,705	10,003	4
경기	3.5	6	781,811	50,002	2
광주	3.1	7	71,442	3,472	10
울산	2.8	8	55,456	2,962	13
경북	2.5	9	109,271	4,894	8
충북	2.4	10	78,237	3,635	9
충남	2.3	11	110,732	6,201	6
전북	2.3	12	74,733	2,941	14
강원	2.2	13	78,003	3,090	11
경남	2.2	14	152,350	7,845	5
전남	2.0	15	64,785	2,688	15
제주	1.7	16	30,573	968	16
2012년	실업률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인천	4.5	1	227,351	12,995	3
서울	4.2	2	810,281	63,282	1
부산	3.9	3	209,754	10,442	4
대전	3.7	4	87,124	4,045	10
경기	3.3	5	862,556	56,753	2
대구	3.3	6	118,722	5,431	8
광주	2.7	7	73,003	3,566	11
울산	2.6	8	62,156	3,239	13
강원	2.5	9	83,484	3,188	14
경북	2.5	10	112,146	6,592	7
충남	2.3	11	122,464	7,164	6
충북	2.0	12	85,866	4,551	9
전북	2.0	13	77,211	3,256	12
경남	1.9	14	162,043	8,585	5
전남	1.6	15	66,747	3,183	15
제주	1.6	16	31,796	1,185	16

구분	실업률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3년	실업률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인천	4.2	1	240,209	13,049	3
서울	4.0	2	829,460	60,045	1
부산	3.8	3	223,482	11,215	4
대구	3.3	4	134,732	5,785	8
대전	3.1	5	86,823	4,038	9
경북	3.1	6	131,572	6,167	7
경기	3.0	7	912,929	55,230	2
광주	2.9	8	76,684	3,367	12
충남	2.8	9	125,799	6,445	6
강원	2.4	10	85,970	3,004	15
충북	2.1	11	92,045	3,993	10
전남	2.1	12	71,550	3,166	14
울산	2.1	13	66,175	3,868	11
경남	2.1	14	179,249	9,406	5
전북	2.0	15	81,167	3,283	13
제주	1.8	16	36,353	1,268	16
2014년	실업률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인천	4.7	1	179,700	11,151	4
서울	4.5	2	823,675	59,919	2
대구	3.9	3	146,391	7,030	7
부산	3.8	4	218,387	11,403	3
경기	3.4	5	936,799	60,434	1
대전	3.4	6	89,572	4,178	10
충남세종	3.4	7	129,454	6,697	8
강원	3.1	8	86,472	3,427	14
충북	3.0	9	94,482	4,400	9
전남	2.9	10	74,781	3,094	15
경북	2.9	11	147,521	7,148	6
광주	2.8	12	80,568	3,579	13
울산	2.7	13	66,838	3,906	11
전북	2.5	14	85,138	3,785	12
경남	2.5	15	172,602	10,778	5
제주	2.0	16	34,994	1,603	16

(3) 지역별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과 국세체납 통계 분석

지역별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과 체납발생 현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24>와 같다.

<표 24> 2011~2014년 지역별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및 체납발생 현황

구분	고용률		당해연도 체납발생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고용률	순위	금액(억원)	순위	비율	순위
서울	59.7	10	63,935	1	62.5	12
경기	59.1	8	50,002	2	61.2	9
인천	60.3	12	12,994	3	63.3	13
부산	54.4	1	10,003	4	56.4	1
경남	60.1	11	7,845	5	61.5	10
충남	60.9	13	6,201	6	62.4	11
대구	56.8	4	5,517	7	59.0	4
경북	62.0	14	4,894	8	63.6	15
충북	59.6	9	3,635	9	61.1	8
광주	56.6	3	3,472	10	58.4	3
강원	56.4	2	3,090	11	57.6	2
대전	57.3	5	2,982	12	59.4	6
울산	59.0	7	2,962	13	60.7	7
전북	57.8	6	2,941	14	59.1	5
전남	62.1	15	2,688	15	63.3	14
제주	65.8	16	968	16	66.9	16
2012년	고용률	순위	금액(억원)	순위	비율	순위
서울	59.7	11	63,282	1	62.3	11
경기	59.5	9	56,753	2	61.6	10
인천	61.2	12	12,995	3	64.2	15
부산	55.6	1	10,442	4	57.9	2
경남	59.6	10	8,585	5	60.7	8
충남	61.5	13	7,164	6	62.9	12
경북	62.0	14	6,592	7	63.6	13
대구	58.2	6	5,431	8	60.2	7
충북	58.7	7	4,551	9	59.9	6
대전	57.5	5	4,045	10	59.7	5
광주	56.2	2	3,566	11	57.8	1
전북	57.4	4	3,256	12	58.6	4
울산	59.2	8	3,239	13	60.8	9
강원	56.7	3	3,188	14	58.2	3
전남	62.6	15	3,183	15	63.6	14
제주	66.2	16	1,185	16	67.3	16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체납액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높은 순위(1순위)부여

구분	고용률		당해연도 체납발생		경제활동참가율	
2013년	고용률	순위	금액(억원)	순위	비율	순위
서울	59.8	8	60,045	1	62.3	11
경기	60.0	11	55,230	2	61.8	10
인천	61.0	12	13,049	3	63.7	13
부산	55.8	1	11,215	4	58.0	2
경남	59.9	10	9,406	5	61.1	9
충남	62.8	15	6,445	6	64.6	15
경북	61.7	14	6,167	7	63.7	14
대구	57.7	5	5,785	8	59.6	6
대전	57.7	4	4,038	9	59.5	5
충북	59.8	9	3,993	10	61.0	8
울산	58.7	7	3,868	11	60.0	7
광주	57.0	3	3,367	12	58.7	3
전북	58.1	6	3,283	13	59.3	4
전남	61.7	13	3,166	14	63.0	12
강원	55.9	2	3,004	15	57.3	1
제주	65.9	16	1,268	16	67.1	16
2014년	고용률	순위	금액(억원)	순위	비율	순위
경기	61.3	12	60,434	1	63.4	11
서울	60.4	9	59,919	2	63.2	10
부산	56.4	1	11,403	3	58.6	2
인천	61.0	11	11,151	4	64.0	13
경남	59.7	8	10,778	5	61.2	7
경북	62.8	15	7,148	6	64.7	15
대구	58.4	5	7,030	7	60.7	6
충남세종	62.4	14	6,697	8	64.6	14
충북	61.8	13	4,400	9	63.7	12
대전	59.4	7	4,178	10	61.5	8
울산	57.9	4	3,906	11	59.5	4
전북	57.7	3	3,785	12	59.1	3
광주	58.6	6	3,579	13	60.4	5
강원	56.5	2	3,427	14	58.3	1
전남	61.0	10	3,094	15	62.8	9
제주	66.6	16	1,603	16	68.0	16

실업률이 높을수록 체납발생액이 많아지므로 보조지표인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체납발생액이 많아 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 이러한 예상과 달리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과 체납발생액 간에는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고용된 사람보다 실직하여 조세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체납발생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 지역별 장애인 고용률과 국세채납 통계 분석

지역별 장애인 고용률과 채납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25>와 같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채납발생액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장애인 고용률 순위와 채납발생액 순위가 5단계 이상 차이나는 예외 지역은 전남, 부산, 인천이 대표적이다. 전남은 장애인 고용률과 채납발생액 수준이 모두 낮은 반면, 부산·인천은 장애인 고용률과 채납발생액 수준이 모두 높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행정의 혜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통해 정부 지원혜택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 ② 국가행정의 반대급부인 조세 납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납부 성실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

<표 25> 2011~2014년 지역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납발생 현황

구분	장애인 고용률		당해연도 채납발생		
	비율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2011년					
서울	1.97	1	754,331	63,935	1
경기	2.28	2	781,811	50,002	2
충남	2.28	3	110,732	6,201	6
전남	2.28	4	64,785	2,688	15
경남	2.29	5	152,350	7,845	5
대전	2.47	6	77,796	2,982	12
경북	2.52	7	109,271	4,894	8
대구	2.59	8	113,834	5,517	7
울산	2.60	9	55,456	2,962	13
전북	2.64	10	74,733	2,941	14
충북	2.68	11	78,237	3,635	9
강원	2.76	12	78,003	3,090	11
제주	2.87	13	30,573	968	16
부산	2.92	14	196,705	10,003	4
광주	2.93	15	71,442	3,472	10
인천	2.96	16	214,327	12,994	3

※ 장애인 고용률 낮을수록 채납액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높은 순위(1순위)부여

구분	장애인 고용률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2년	비율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2.06	1	810,281	63,282	1
경기	2.30	2	862,556	56,753	2
경남	2.35	3	162,043	8,585	5
충남	2.36	4	122,464	7,164	6
전남	2.37	5	66,747	3,183	15
경북	2.42	6	112,146	6,592	7
울산	2.47	7	62,156	3,239	13
충북	2.55	8	85,866	4,551	9
대구	2.62	9	118,722	5,431	8
대전	2.70	10	87,124	4,045	10
전북	2.90	11	77,211	3,256	12
부산	2.94	12	209,754	10,442	4
광주	2.97	13	73,003	3,566	11
강원	3.00	14	83,484	3,188	14
인천	3.01	15	227,351	12,995	3
제주	3.35	16	31,796	1,185	16
2013년	비율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2.22	1	829,460	60,045	1
경기	2.37	2	912,929	55,230	2
울산	2.43	3	66,175	3,868	11
경남	2.48	4	179,249	9,406	5
충남	2.51	5	125,799	6,445	6
경북	2.55	6	131,572	6,167	7
전남	2.56	7	71,550	3,166	14
충북	2.72	8	92,045	3,993	10
대전	2.85	9	86,823	4,038	9
강원	3.00	10	85,970	3,004	15
대구	3.01	11	134,732	5,785	8
광주	3.03	12	76,684	3,367	12
전북	3.08	13	81,167	3,283	13
부산	3.11	14	223,482	11,215	4
인천	3.13	15	240,209	13,049	3
제주	3.38	16	36,353	1,268	16

구분	장애인 고용률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4년	실업률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2.26	1	823,675	59,919	2
경기	2.46	2	936,799	60,434	1
경남	2.48	3	172,602	10,778	5
충남세종	2.51	4	129,454	6,697	8
울산	2.52	5	66,838	3,906	11
경북	2.58	6	147,521	7,148	6
충북	2.86	7	94,482	4,400	9
대전	2.87	8	89,572	4,178	10
전남	2.90	9	74,781	3,094	15
대구	3.02	10	146,391	7,030	7
인천	3.08	11	179,700	11,151	4
부산	3.20	12	218,387	11,403	3
전북	3.30	13	85,138	3,785	12
강원	3.32	14	86,472	3,427	14
광주	3.37	15	80,568	3,579	13
제주	3.42	16	34,994	1,603	16

(4) 분석 결과

분석결과 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②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일부 예외지역이 존재하지만 지역별 고용이 국세체납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고용지표가 지역별 경제상황 및 법인·개인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결과 4 : “지역별 고용이 국세체납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 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 ②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5. 지역별 공공혜택 수준이 국세체납에 미치는 영향

(1) 변수의 설정

공공혜택수준이 높은 경우 납세자들은 이를 조세납부에 따른 혜택이라고 인식하고 납세 성실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과 관련하여 국가통계지표에서 제시된 공공혜택수준 지표들과 체납발생액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통계상 공공혜택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① 사회보장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② 여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체육시설 수 ③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천 명당 사설학원 수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 지표들과 체납발생액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2) 지역별 사회보장수준과 국세체납 통계 분석

지역별 사회보장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와 체납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26>과 같다.

<표 26> 2011~2014년 지역별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및 체납발생 현황

구분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당해연도 체납발생		
	수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울산	5.20	1	55,456	2,962	13
부산	5.97	2	196,705	10,003	4
서울	6.66	3	754,331	63,935	1
경남	9.28	4	152,350	7,845	5
대전	9.57	5	77,796	2,982	12
광주	9.70	6	71,442	3,472	10
대구	9.85	7	113,834	5,517	7
인천	10.82	8	214,327	12,994	3
경기	11.72	9	781,811	50,002	2
경북	13.71	10	109,271	4,894	8
제주	14.06	11	30,573	968	16
충남	15.61	12	110,732	6,201	6
전북	16.06	13	74,733	2,941	14
전남	18.02	14	64,785	2,688	15
강원	19.20	15	78,003	3,090	11
충북	21.50	16	78,237	3,635	9

※ 사회보장수준이 낮을수록 체납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높은 순위(1순위)부여

구분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2년	수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울산	5.06	1	62,156	3,239	13
서울	6.95	2	810,281	63,282	1
부산	7.32	3	209,754	10,442	4
경남	9.40	4	162,043	8,585	5
광주	9.73	5	73,003	3,566	11
대전	10.10	6	87,124	4,045	10
인천	11.39	7	227,351	12,995	3
대구	11.97	8	118,722	5,431	8
경기	12.87	9	862,556	56,753	2
제주	14.39	10	31,796	1,185	16
경북	14.82	11	112,146	6,592	7
충남	16.32	12	122,464	7,164	6
전북	16.71	13	77,211	3,256	12
전남	18.54	14	66,747	3,183	15
강원	20.28	15	83,484	3,188	14
충북	22.48	16	85,866	4,551	9
2013년	수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서울	6.88	1	829,460	60,045	1
울산	6.92	2	66,175	3,868	11
경남	7.29	3	179,249	9,406	5
부산	7.34	4	223,482	11,215	4
대전	9.92	5	86,823	4,038	9
광주	10.39	6	76,684	3,367	12
인천	11.25	7	240,209	13,049	3
대구	11.99	8	134,732	5,785	8
경기	13.37	9	912,929	55,230	2
제주	14.15	10	36,353	1,268	16
경북	14.82	11	131,572	6,167	7
충남	17.14	12	125,799	6,445	6
전북	17.35	13	81,167	3,283	13
전남	18.56	14	71,550	3,166	14
충북	22.70	15	92,045	3,993	10
강원	23.86	16	85,970	3,004	15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혜택 수준이 낮을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수록 조세납부의 성실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한다.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순위와 체납발생액 순위 간 차이가 많이 나는 예외 지역으로는 울산, 경기, 충남 지역이 있다. 울산지역은 사회복지시설수와 체납발생액이 모두 적고, 경기·충남 지역은 사회복지시설수와 체납발생액 모두 많다.

(3) 지역별 여가·문화수준과 국제체납 통계 분석

지역별 여가·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 체육시설 수와 체납 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27>과 같다.

<표 27> 2011~2014년 지역별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체육시설 수 및 체납발생 현황

구분	문화기반시설		당해연도 체납발생		체육시설	
2011년	수	순위	금액(억원)	순위	수	순위
서울	2.82	5	63,935	1	114.32	10
경기	3.17	7	50,002	2	113.85	9
인천	2.57	4	12,994	3	111.59	7
부산	2.06	1	10,003	4	91.33	1
경남	4.56	9	7,845	5	109.74	5
충남	6.38	11	6,201	6	105.36	4
대구	2.35	2	5,517	7	98.43	2
경북	6.45	12	4,894	8	115.29	11
충북	6.72	13	3,635	9	111.52	6
광주	2.87	6	3,472	10	122.31	13
강원	10.41	15	3,090	11	130.11	15
대전	3.30	8	2,982	12	103.19	3
울산	2.55	3	2,962	13	129.90	14
전북	5.98	10	2,941	14	116.38	12
전남	7.78	14	2,688	15	111.89	8
제주	16.49	16	968	16	140.76	16
2012년	수	순위	금액(억원)	순위	수	순위
서울	2.93	5	63,282	1	112.37	9
경기	3.36	8	56,753	2	114.58	12
인천	2.74	4	12,995	3	112.20	8
부산	2.15	1	10,442	4	91.31	1
경남	4.82	9	8,585	5	105.05	4
충남	6.51	11	7,164	6	101.10	3
경북	6.67	12	6,592	7	109.92	7
대구	2.43	2	5,431	8	99.38	2
충북	7.09	13	4,551	9	108.39	6
대전	3.35	7	4,045	10	105.08	5
광주	3.13	6	3,566	11	112.37	10
전북	6.25	10	3,256	12	116.53	13
울산	2.53	3	3,239	13	126.82	14
강원	10.85	15	3,188	14	126.87	15
전남	8.48	14	3,183	15	114.53	11
제주	17.30	16	1,185	16	143.56	16

※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체육시설 수가 적을수록 체납액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높은 순위(1순위)부여

구분	문화기반시설		당해연도 체납발생		체육시설	
2013년	수	순위	금액(억원)	순위	수	순위
서울	3.19	5	60,045	1	112.32	11
경기	3.61	8	55,230	2	113.91	12
인천	2.85	3	13,049	3	109.38	8
부산	2.21	1	11,215	4	90.00	1
경남	5.28	9	9,406	5	99.77	3
충남	7.18	12	6,445	6	103.97	4
경북	6.82	10	6,167	7	111.58	10
대구	2.56	2	5,785	8	96.06	2
대전	3.46	7	4,038	9	104.97	5
충북	7.57	13	3,993	10	108.79	7
울산	3.03	4	3,868	11	127.20	14
광주	3.39	6	3,367	12	110.19	9
전북	7.15	11	3,283	13	107.69	6
전남	9.07	14	3,166	14	116.66	13
강원	11.80	15	3,004	15	127.80	15
제주	20.88	16	1,268	16	140.62	16
2014년	수	순위	금액(억원)	순위	수	순위
경기	3.89	8	60,434	1	113.97	10
서울	3.39	4	59,919	2	111.07	8
부산	2.24	1	11,403	3	88.74	1
인천	3.03	3	11,151	4	103.39	5
경남	5.58	9	10,778	5	99.07	3
경북	7.15	10	7,148	6	112.97	9
대구	2.65	2	7,030	7	97.78	2
충남세종	7.23	11	6,697	8	102.46	4
충북	7.98	13	4,400	9	110.20	7
대전	3.53	6	4,178	10	107.45	6
울산	3.43	5	3,906	11	133.83	15
전북	7.91	12	3,785	12	117.71	11
광주	3.66	7	3,579	13	127.99	14
강원	12.82	15	3,427	14	126.00	13
전남	9.39	14	3,094	15	119.16	12
제주	20.58	16	1,603	16	141.93	16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체육시설이 적을수록 체납발생액이 많은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여가·문화 혜택의 수준이 낮을수록 체납발생액이 많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시설 수 순위와 체납발생액 순위차이가 큰 예외지역은 문화기반시설과 체육시설이 상이하지만, 예외지역의 수를 고려할 때 문화기반시설이 체육시설보다 체납발생액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지역별 교육여건과 국세체납 통계 분석

지역별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천 명당 사설학원수와 체납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28>과 같다.

<표 28> 2011~2014년 지역별 천 명당 사설학원 수 및 체납발생 현황

구분	천 명당 사설학원 수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1년	수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인천	1.01	1	214,327	12,994	3
서울	1.31	2	754,331	63,935	1
경북	1.38	3	109,271	4,894	8
충남	1.40	4	110,732	6,201	6
부산	1.42	5	196,705	10,003	4
대전	1.43	6	77,796	2,982	12
대구	1.49	7	113,834	5,517	7
전남	1.51	8	64,785	2,688	15
경기	1.56	9	781,811	50,002	2
광주	1.56	11	71,442	3,472	10
충북	1.56	10	78,237	3,635	9
강원	1.61	12	78,003	3,090	11
제주	1.66	13	30,573	968	16
경남	1.80	14	152,350	7,845	5
전북	2.11	15	74,733	2,941	14
울산	2.29	16	55,456	2,962	13
2012년	수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인천	1.17	1	227,351	12,995	3
서울	1.34	2	810,281	63,282	1
경북	1.37	3	112,146	6,592	7
부산	1.37	4	209,754	10,442	4
충남	1.39	5	122,464	7,164	6
광주	1.39	6	73,003	3,566	11
대구	1.41	7	118,722	5,431	8
대전	1.42	8	87,124	4,045	10
전남	1.49	9	66,747	3,183	15
강원	1.52	10	83,484	3,188	14
경기	1.53	11	862,556	56,753	2
충북	1.53	12	85,866	4,551	9
제주	1.68	13	31,796	1,185	16
경남	1.78	14	162,043	8,585	5
전북	2.14	15	77,211	3,256	12
울산	2.21	16	62,156	3,239	13

※ 천 명당 사설학원 수가 적을수록 체납액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높은 순위(1순위)부여

구분	천 명당 사설학원 수		당해연도 체납발생		
2013년	수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인천	1.11	1	240,209	13,049	3
부산	1.31	3	223,482	11,215	4
충남	1.31	2	125,799	6,445	6
서울	1.32	4	829,460	60,045	1
경북	1.33	5	131,572	6,167	7
대전	1.41	6	86,823	4,038	9
대구	1.45	7	134,732	5,785	8
전남	1.46	8	71,550	3,166	14
경기	1.48	9	912,929	55,230	2
충북	1.50	10	92,045	3,993	10
강원	1.51	11	85,970	3,004	15
제주	1.65	12	36,353	1,268	16
경남	1.70	13	179,249	9,406	5
울산	1.99	14	66,175	3,868	11
전북	2.10	15	81,167	3,283	13
광주	2.29	16	76,684	3,367	12
2014년	수	순위	건수	금액(억원)	순위
인천	1.09	1	179,700	11,151	4
부산	1.29	2	218,387	11,403	3
충남세종	1.32	3	129,454	6,697	8
서울	1.35	4	823,675	59,919	2
대전	1.36	5	89,572	4,178	10
경북	1.42	6	147,521	7,148	6
경기	1.46	7	936,799	60,434	1
강원	1.46	8	86,472	3,427	14
대구	1.46	9	146,391	7,030	7
충북	1.49	10	94,482	4,400	9
전남	1.50	11	74,781	3,094	15
제주	1.64	12	34,994	1,603	16
경남	1.76	13	172,602	10,778	5
울산	2.02	14	66,838	3,906	11
전북	2.13	15	85,138	3,785	12
광주	2.37	16	80,568	3,579	13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천 명당 사설학원 수가 적을수록 체납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교육여건을 반영하는 변수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위 분석에 한정하여 판단한다면 교육여건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체납발생액이 많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여건이 좋을수록 조세납부의 혜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납부성실도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5) 분석 결과

분석결과 ① 사회보장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② 여가·문화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③ 교육여건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일부 예외 지역이 존재하지만 지역별 공공혜택수준이 낮을수록 체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공공혜택수준이 높은 경우 조세납부에 따른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납부성실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과 5 : “공공혜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 ① 사회보장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 ② 여가·문화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 ③ 교육여건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제 2 절 세목별 국세채납 분석

1. 소득세율 변화가 소득세 채납에 미치는 영향

(1) 소득세율의 변화

최근 종합소득세율의 변화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29>와 같다.

<표 29> 종합소득세율의 변화

(단위: 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4년, 2015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35%	14,900,000
150,000,000 초과	38%	19,400,000



종합소득세 세율 (2012년, 2013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5%	14,900,000
300,000,000 초과	38%	23,900,000



종합소득세 세율 (2010년, 2011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35%	14,900,000

※ 세율 적용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위의 표에서 ① 첫 번째 변화는 2012년 귀속부터 과세표준의 구간이 4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나고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된 것이다. ② 두 번째 변화는 2014년 귀속부터 최고세율 38% 적용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 초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두 변화는 소득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소득세 체납의 변화

2011년~2014년 소득세 체납발생액 현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30>과 같다.

<표 30> 2011~2014년 소득세 체납발생 현황

(단위: 억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26,645	41,802	931,077	50,430	948,636	40,398	960,826	45,121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소득세 체납을 분석하면 ①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고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된 2012년의 소득세 체납액은 전년 체납발생액 4.1조원 대비 약 1조원 상승한 5조원에 이른다. ② 최고세율에 속하는 소득구간이 확대된 2014년의 경우에도 전년 체납발생액 4조원 대비 약 5천억 상승한 4.5조원의 소득세 체납이 발생하였다.

(3) 분석 결과

분석결과 소득세율이 상승한 경우 전년 대비 소득세 체납발생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소득세율이 높아질수록 체납발생액이 많아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율의 증가는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조세회피의 일종인 체납유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다.

결과 6-1 :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소득세 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2. 법인세율 변화가 법인세 체납에 미치는 영향

(1) 법인세율의 변화

최근 법인세율의 변화 중 법인의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법인세율의 변화

법인세 세율 (2012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비영리 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9%			9%		



법인세 세율 (2011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2억 이하	10%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 법인	2억 이하	10%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9%			9%		

위의 표에 제시된 법인세율의 변화는 2011년 법인세율과 달리 2012년부터 ① 과세표준의 구간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나고 ② 세율도 10% 22%에서 10% 20% 22% 세 단계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기존의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법인은 22%보다 낮은 20%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법인세 체납의 변화

2011년~2014년 법인세 체납발생액 현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32>와 같다.

<표 32> 2011~2014년 법인세 체납발생 현황

(단위: 억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9,131	11,862	72,807	12,713	72,290	11,760	75,233	11,902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법인세 체납을 분석하면 2011~2014년 동안 체납발생액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이 많아지고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법인에게 22%보다 낮은 20%를 적용한 2012년에는 오히려 전년 체납액 1.2조원 대비 1천억 가량 증가한 1.2조원의 법인세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3) 분석 결과

분석결과 법인세율의 변화가 법인세 체납발생액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부담이 경감된 2012년에 선행연구에 따른 예상과 달리 법인세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① 법인세율 인하가 정부지원정책이라면 법인이 인식하는 적발가능성이나 체납 시 추정가능성이 낮아져 체납유인이 높아진 것이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② 또한 법인세율인하 외 감면·공제 등 법인 지원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법인들이 실제 인식하는 조세부담이 증가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 6-2 : “법인세율의 변화가 법인세 체납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다.”

제 6 장 국세채납 요인의 통계분석

앞서 논의한 국세채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본적인 분석 방법인 순위통계를 파악하기 위한 스피어만 등위상관계수(Spearman rank-order correlation coefficient)분석 ② 채납발생액과 주요 요인변수와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분석 ③ 주요 요인변수들의 채납발생액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제 1 절 Spearman 등위상관계수 분석

1. 변수의 설정

채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들을 기호로 설정하면 아래의 <표 33>과 같다.

<표 33> 채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수 설정

v1	지역명
v2	채납발생액
v3	소득수준_GRDP
v4	소득수준_1인당 GRDP
v5	경제상황_부도업체수
v6	경제상황_국민기초생활수급자
v7	비임금근로자비율
v8	고용_실업률
v9	고용_고용율
v10	고용_경제활동참가율
v11	고용_장애인고용율
v12	공공혜택수준_인구십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v13	공공혜택수준_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v14	공공혜택수준_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v15	공공혜택수준_천명당사설학원수

2. Spearman 상관계수 결과

(1) Spearman 상관계수

Spearman 등위 상관계수는 측정치 사이에 동간성이 없을 때, 또는 사례 수가 적거나 상관관계를 빨리 알고자 할 때 계산하는 상관계수로서 스피어만(C. Spearman)이 유도한 아래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rho = 1 - \frac{\sigma \sum D_i^2}{N(N^2 - 1)}$$

D_i : X변인에서의 등위와 Y변인에서의 등위 간의 차이

N : X와 Y변인의 수치를 한 짝으로 한 사례수

이 방법은 분포의 정상성을 가정하지 않은 비모수적 통계 방법의 하나로서, 다른 상관계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1.0 사이에 놓이게 되며 체납발생액과 영향 요인 간의 Spearman 상관계수 결과는 아래의 <표 34>와 같다.

<표 34> 체납발생 요인별 Spearman 등위상관계수

	v2	v3	v4	v5	v6	v7	v8
v2	1.000						
v3	0.7444	1.000					
v4	0.0585	0.6227	1.000				
v5	0.7056	0.3992	-0.3748	1.000			
v6	0.6515	0.5735	-0.0901	0.8351	1.000		
v7	-0.4593	-0.2091	0.1433	-0.3133	0.0160	1.000	
v8	0.6476	0.2570	-0.3397	0.5988	0.4253	-0.6741	1.000
v9	0.0150	0.2961	0.6062	-0.2580	-0.0753	0.3643	-0.3282
v10	0.1283	0.3178	0.5322	-0.1644	-0.0284	0.2220	-0.3282
v11	-0.3524	-0.7113	-0.6010	-0.2382	-0.3581	0.0729	0.0017
v12	-0.4135	-0.2937	0.1229	-0.4777	-0.1941	0.7105	-0.5309
v13	-0.5415	-0.2581	0.3288	-0.5705	-0.3452	0.7364	-0.7657
v14	-0.4797	-0.2204	0.2451	-0.3654	-0.2785	0.1303	-0.3609
v15	-0.5847	-0.3046	0.0418	-0.3237	-0.3623	0.1651	-0.6443

(2) 결과 분석

체납발생액(v2)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Spearman 상관계수를 보면 제5장에서 순위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즉, 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v3) ②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v5,v6) ③ 지역별 고용지표인 실업률이 높을수록(v8) 장애인 고용률이 낮을수록(v11)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 ④ 공공혜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v12,v13,v14,v15)한다.

앞선 분석과 차이를 보이는 영향요인으로 ①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RDP(v4)가 체납발생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측정(0.0585)되었고, 이는 결과1의 예외 지역인 울산, 전남, 부산 등에서 발생하는 순위 격차의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② 결과3과 달리 Spearman 상관계수 분석 결과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비율(v7)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발생액이 적게 발생(-0.4593)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가 선행 연구 결과처럼 과소신고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된 국세를 체납할 경우 세무조사 등의 제재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체납을 적게 한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요인변수와 체납발생액 순위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가 Spearman 상관계수 분석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분석의 통계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발생액과 영향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하도록 한다.

제 2 절 상관계수

1. 상관계수 결과

상관계수는 표준화된 두 변수 간의 공변관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2개의 특성치 x와 y 사이의 관련성 정도를 가리키는 지수이다.

$$Corr = \frac{\sum (X - \bar{X}) \cdot (Y - \bar{Y})}{S_x \cdot S_y}, \quad -1 < Corr < 1$$

채납발생액과 채납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결과는 아래의 <표 35>와 같다.

<표 35> 채납발생 요인별 상관계수

	v2	v3	v4	v5	v6	v7	v8
v2	1.000						
v3	0.9735	1.000					
v4	-0.0281	0.1367	1.000				
v5	0.8875	0.8288	-0.0853	1.000			
v6	0.8544	0.8439	-0.2373	0.8033	1.000		
v7	-0.4246	-0.3420	-0.0279	-0.3717	-0.1773	1.000	
v8	0.5011	0.4100	-0.2275	0.5111	0.4757	-0.6471	1.000
v9	0.0226	0.0761	0.2529	-0.0704	-0.1632	0.4100	-0.2849
v10	0.1241	0.1613	0.2192	0.0284	-0.0755	0.2923	-0.0912
v11	-0.5182	-0.6356	-0.4618	-0.4972	-0.4659	0.0524	-0.0428
v12	-0.3140	-0.2895	-0.1107	-0.3999	-0.2546	0.6885	-0.5388
v13	-0.3209	-0.3259	-0.0443	-0.3148	-0.4138	0.6306	-0.6111
v14	-0.0966	-0.1180	0.2250	-0.1224	-0.3892	0.1590	-0.4507
v15	-0.2640	-0.2258	0.2627	-0.2366	-0.2976	0.0293	-0.5416

2. 결과 분석

체납발생액(v2)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관계수를 보면 Spearman 등위상관계수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체납발생액과 영향요인 간의 공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분석하면 ① GRDP(v3)가 높을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0.9735) ②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v5,v6) ③ 지역별 고용지표인 실업률이 높을수록(v8) 장애인 고용률이 낮을수록(v11)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 ④ 공공주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v12,v13,v14,v15)한다.

Spearman 상관계수 분석과 동일하게 ①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RDP(v4)가 체납발생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측정(-0.0281)되었고, ② 비임금 근로자비율(v7)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발생액이 적게 발생(-0.4246)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상관계수 분석을 종합해보면 체납발생액과 영향요인변수 간의 공변관계 분석 결과가 ① 순위 측정을 통한 제5장의 분석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고 ② 등위상관계수인 Spearman 상관계수 분석 결과와는 모든 영향요인 변수에서 일치한다.

제 3 절 회귀 분석

1.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하나나 그 이상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의 추정을 할 수 있는 통계기법으로서 하나의 독립변수를 가진 회귀분석에서 하나의 방정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결합분포를 보여 주는 지점들의 분포구성을 통해 하나의 회귀선을 나타낸다.

$$Y_i = a + bX_i + e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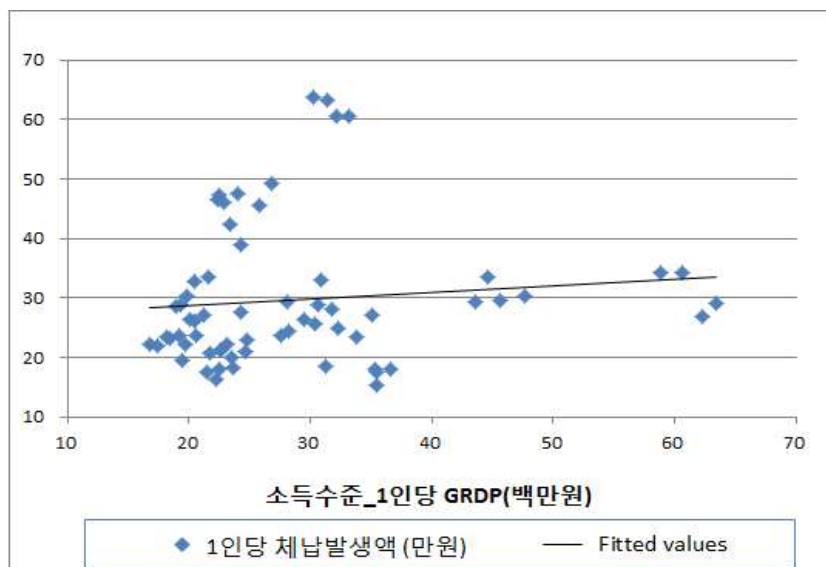
(X_i 독립변수, a 는 Y절편, b 는 회귀선의 기울기, e_i 는 회귀선의 예측오차)

회귀선은 흩어진 점들에 가장 적합한 선으로 회귀선의 기울기 b 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2. 체납발생액과 영향요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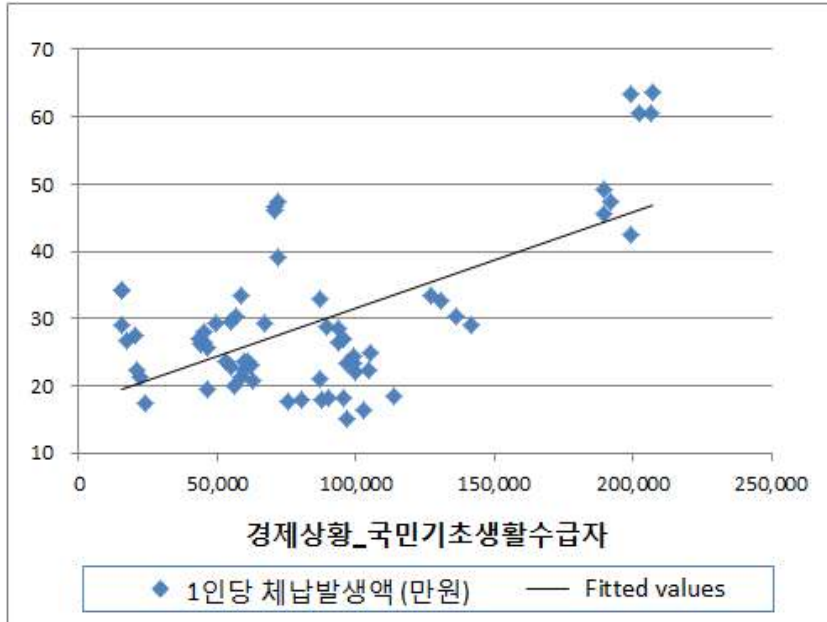
체납발생액을 인구수로 나누어 규모를 조정한 1인당 체납발생액과 영향요인 변수와의 관계를 회귀선을 통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체납발생액과 GRDP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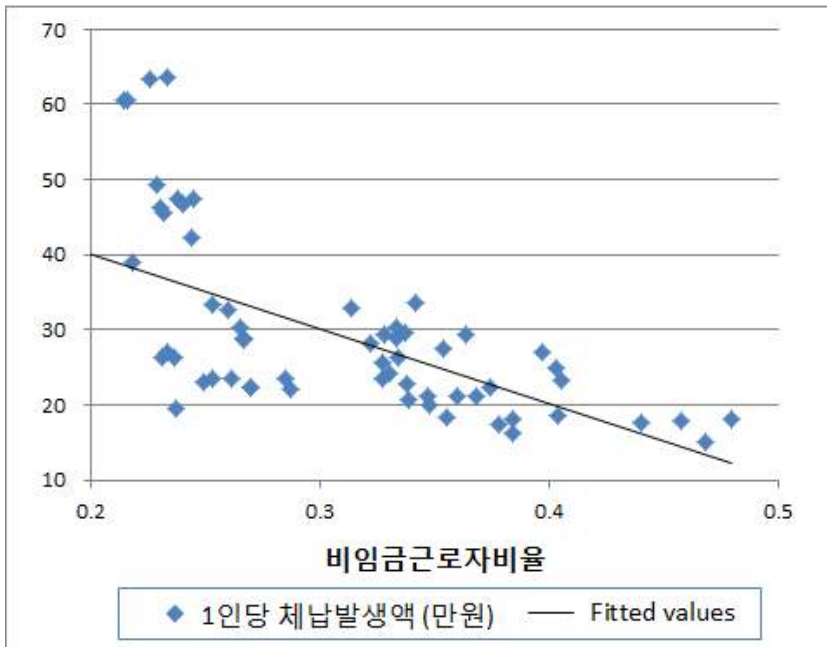
회귀선의 기울기가 (+) 값을 가지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세체납발생액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분석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2) 체납발생액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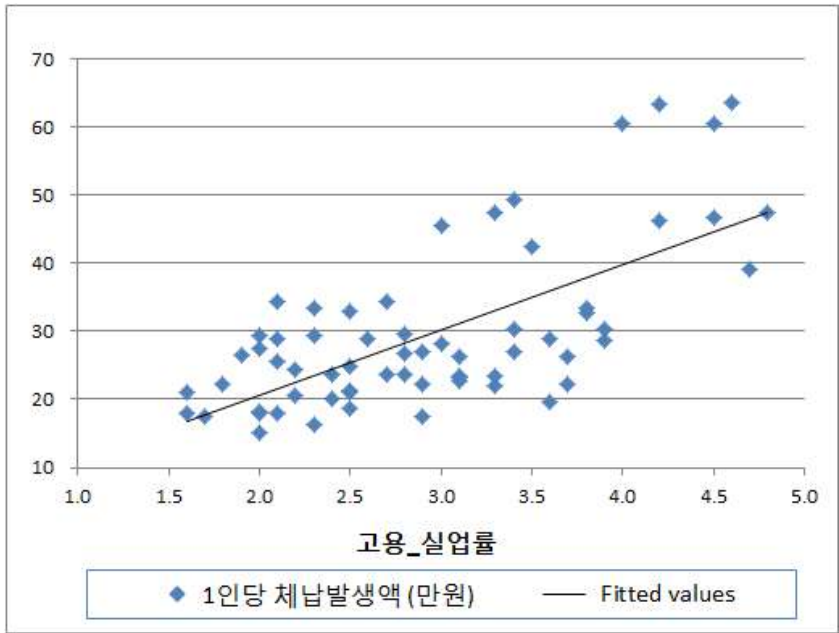
회귀선의 기울기가 (+) 값을 가지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발생액이 많고 이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3) 체납발생액과 비임금근로자비율



회귀선의 기울기가 (-) 값을 가지므로 비임금근로자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 이는 상관계수 및 Spearman상관계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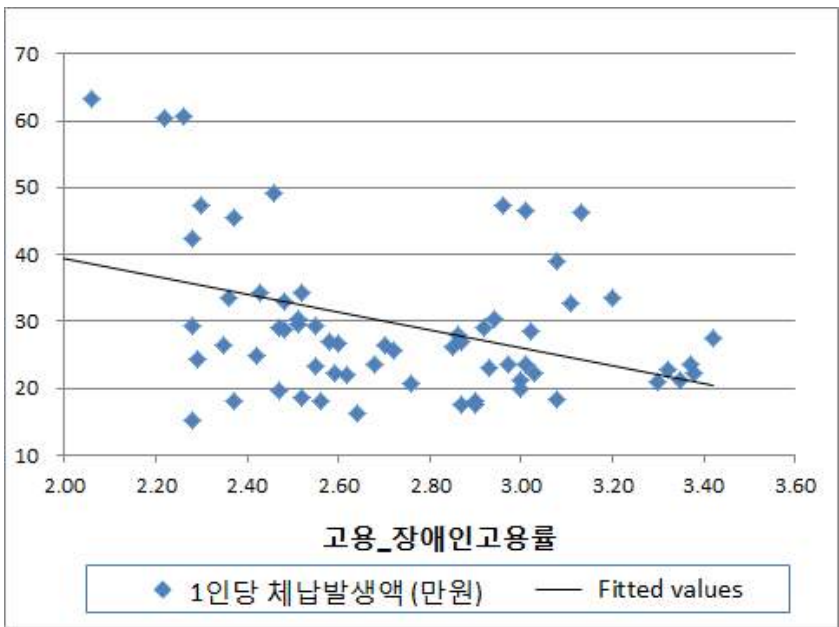
(4) 체납발생액과 실업률 (고용)



회귀선의 기울기가 (+) 값을 가지므로 실업률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 발생액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앞선 분석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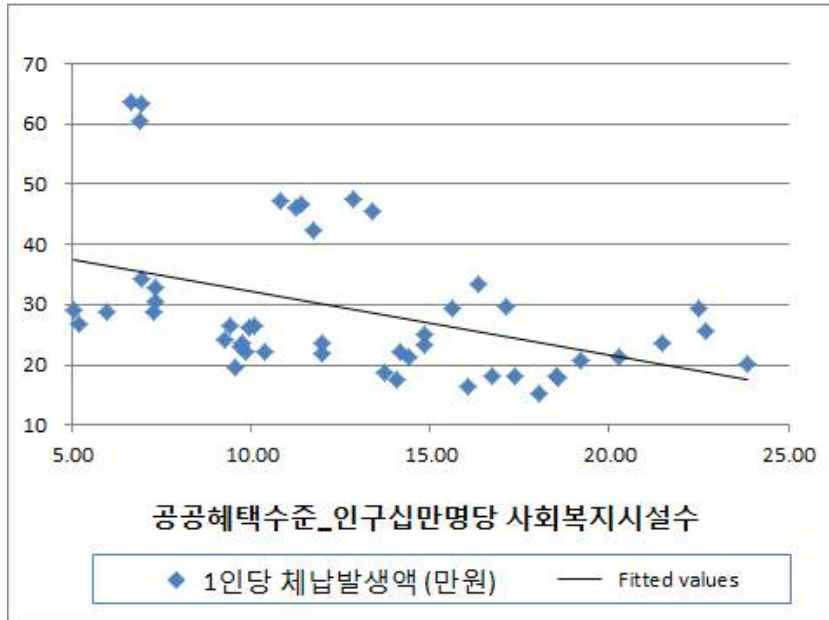
(5) 체납발생액과 장애인고용률 (고용)



회귀선의 기울기가 (-) 값을 가지므로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 발생액이 많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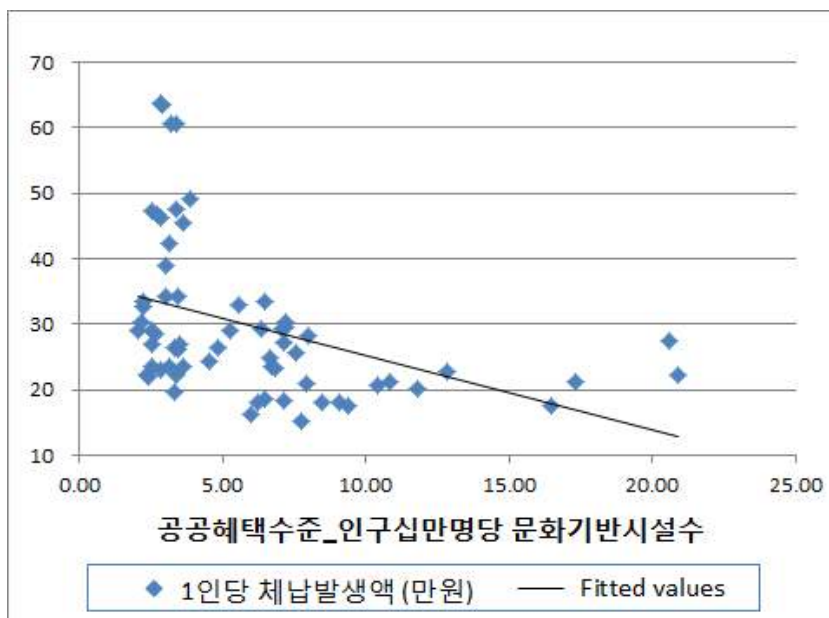
이는 앞선 분석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6) 체납발생액과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공공혜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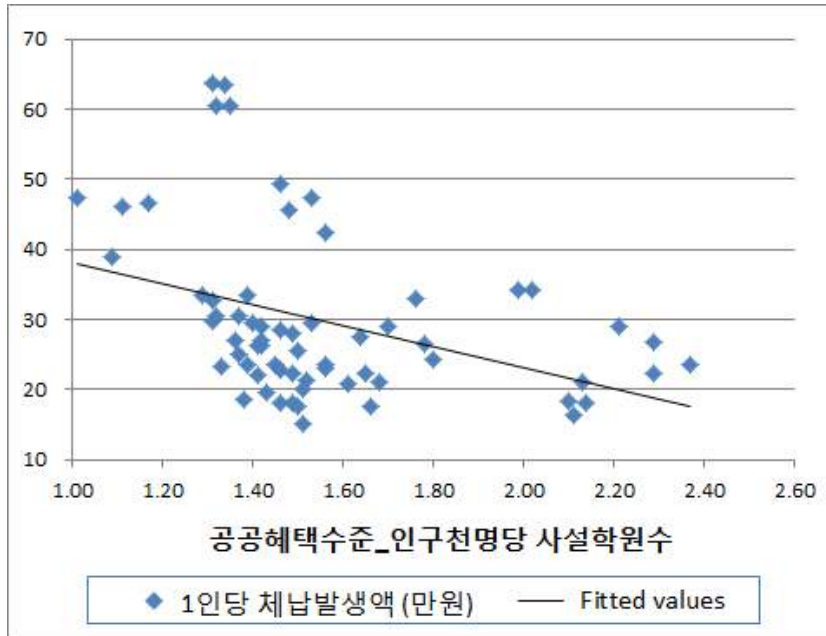
회귀선의 기울기가 (-) 값을 가지므로 사회복지시설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국세 체납발생액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공공혜택수준이 낮을수록 국세체납 발생액이 많아진다는 앞선 분석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7) 체납발생액과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공공혜택수준)



회귀선의 기울기가 (-) 값을 가지므로 문화기반시설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국세 체납발생액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공공혜택수준이 낮을수록 국세체납 발생액이 많아진다는 앞선 분석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8) 체납발생액과 인구천명당 사설학원수 (공공혜택수준)



회귀선의 기울기가 (-) 값을 가지므로 사설학원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 발생액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공공혜택수준이 낮을수록 국세체납 발생액이 많아진다는 앞선 분석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3. 결과 분석

이상과 같은 결과물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체납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위에서 살펴본 여러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각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조건부 관계를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그 결과 1인당 GRDP·실업률은 (+)값, 문화기반시설수는 (-)값으로 나타났다. 체납발생액은 2011년(4.062)을 기준으로 2012년 +0.234 (4.296), 2013년 +0.257(4.319), 2014년 +0.165(4.227)을 가져 2013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②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③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④ 지역별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⑤ 공공혜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앞선 5장의 분석과 비교하여 다양한 관련변수들을 통제한 후 추정된 관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기존 단순회귀와 비교할 때 비임금근로자가 국세체납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만 상이할 뿐 동일하다. 또한 상관계수 및

Spearman 등위상관계수 분석의 결과와는 모든 영향요인 분석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추정계수의 견고성(robustness)을 확인하고, 관찰할 수 없는 다양한 추가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를 고정효과모형은 (2)에 확률효과모형은 (3)에 보고하였다. 추정결과 1인당 GRDP의 경우 OLS 추정 결과와 확률효과모형이 유사하게 추정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확률효과 모형의 결과와는 유사한 반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 추정의 안정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정대상 자료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예측되는 한계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VARIABLES	(1) ols ln_v2	(2) fe ln_v2	(3) re ln_v2
ln_1인당 GRDP	0.692*** (0.145)	0.0676 (0.374)	1.033*** (0.331)
기초생활수급자	1.41e-05*** (9.80e-07)	-1.01e-05*** (3.37e-06)	1.04e-05*** (2.58e-06)
실업률	0.387*** (0.0776)	-0.0493 (0.0407)	0.104* (0.0563)
문화기반시설수	-0.0190 (0.0139)	0.0575*** (0.0212)	0.0169 (0.0234)
2012.year	0.234* (0.123)		
2013.year	0.257** (0.124)		
2014.year	0.165 (0.129)		
Constant	4.062*** (0.630)	9.211*** (1.373)	4.040*** (1.160)
Observations	64	64	64
R-squared	0.895	0.486	
Number of id		16	1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제 7 장 국세체납 요인관련 사례분석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① 지역별 국세체납액에 사회통계 변수가 미치는 영향 ② 세목별 국세체납액에 세율개정이 미치는 영향 ③ 월별 국세체납액에 월별 세무 일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별로 요인 변수들이 체납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변수마다 예외지역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들을 토대로 특정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함으로써 국세체납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1. 특정지역의 선정

(1) 선정기준

지역별 분석대상인 16개 지역 중 특별·광역시(7개)와 도(9개)에서 각각 하나의 지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선정기준은 영향요인별 분석 시 예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함으로써 대부분의 영향요인 변수들이 국세체납액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2) 사례선정 - 서울과 경북지역

국세체납액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요인변수별 예외지역을 제외해보면 ①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이 모든 변수들의 결론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고 ② 도 중에서는 경북이 모든 변수들의 결론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서울과 경북 두 지역의 국세체납발생에 대해 영향요인별로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2. 사례의 분석 - 서울지역과 경북지역의 비교

(1) 두 지역의 통계비교

서울과 경북지역의 국세체납발생액과 영향요인 변수들의 통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6>과 같다.

<표 36> 서울과 경북지역의 국세체납관련 통계

2013년	구분	서울	경북
국세체납발생액	체납발생액(억원)	60,045	6,167
소득수준	GRDP(억원)	3,186,070	891,320
	1인당 GRDP(백만원)	32.10	33.75
경제상황	부도업체수	383	3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1,958	99,437
비임금근로자비율	비임금근로자비율	0.214	0.405
고용	실업률	4.0	3.1
	고용률	59.8	61.7
	경제활동참가율	62.3	63.7
	장애인고용률	2.22	2.55
공공혜택수준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6.88	14.82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3.19	6.82
	인구십만명당 체육시설수	112.32	111.58
	인구천명당 사설학원수	1.32	1.33

(2) 사례분석

2013년 국세체납발생액을 보면 서울은 60,045억 원, 경북은 6,167억 원으로 서울 지역에서 국세체납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국세체납발생액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두 지역을 비교하면 다음의 5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① 소득수준 측면에서 지역내 총생산(GRDP)은 서울지역이 경북지역에 비해 더 크다 ② 경제상황 측면에서 부도업체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서울지역이 경북지역에 비해 더 많다 ③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서울지역이 경북지역에 비해 더 낮다 ④ 고용 측면에서 서울지역이 경북지역에 비해 실업률은 높고 장애인 고용률은 더 낮다 ⑤ 공공혜택수준 측면에서 사회보장수준, 여가·문화수준은 서울지역이 경북지역에 비해 더 낮다

두 지역의 비교결과를 토대로 서울지역에서 경북지역에 비해 더 많은 국세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해 낼 수 있고, 이러한 분석은 앞서 제시한 국세체납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결론 및 예측과 일치한다.

제 8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국세체납정리는 중요한 국가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국세체납 정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체납관련 연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더라도 대부분 법적관점에서 민간위탁 등을 연구하였고 정책적인 조세체납의 실태·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체납관련 이론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주로 개별기업이나 개별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조세회피 행태에 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세체납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연구방법과 달리 국가 전체 국세납부실태를 대상으로 국세 통계자료에 대한 실제자료 분석연구를 하였다.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① 국세체납액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통계청의 사회통계 변수들이 체납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② 국세 체납액을 세목별로 분류하여 세율변화가 체납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지역별 국세체납

지역별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청의 사회 변수 통계들을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① 조세회피 선행연구에서 소득수준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변수로서 분석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지역별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지역별 소득수준은 지역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으로 측정하였고 매년 예외지역은 존재하지만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② 소득수준과 유사한 변수로서 지역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분석을 하였다. 주요 변수로서 부도업체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으로 측정하였고 분석결과 부도업체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③ 조세회피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조세회피의 적발가능성이 낮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탈루가 용이한 자영업자들은 적발가능성이 낮아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조세회피의 일종인 국세체납의 경우 비임금근로자 비율(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국세체납액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통계분석을 보면 가설과 달리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을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가 선행연구 결과처럼 과소신고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된 국세를 체납할 경우 세무조사 등의 제재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체납을 적게 한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④ 사회변수 중 고용지표는 고용자인 법인의 소득수준(법인세) 및 피고용자인 개인납세자의 소득수준(소득세)과 관련이 있고, 법인세·소득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므로 고용지표는 국세체납 연구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변수이다.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사회통계 변수 중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장애인 고용률과 국세체납액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국세체납 발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고용된 사람보다 실직하여 조세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체납발생액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가 행정의 혜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장애인 고용을 통해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국세납부성실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⑤ 공공혜택수준이 높은 경우 납세자들은 이를 조세납부에 따른 혜택이라고 인식하고 납부성실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공공혜택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국가통계상 지표로서 사회보장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여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체육시설 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천 명당 사설학원수와 국세체납발생액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지표가 각각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공공혜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세목별 국세체납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세율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논의되고 있다.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유인이 커짐에 따라 조세회피 행태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조세회피의 유형인 국세체납액이 세율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분석하였다.

① 소득세율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귀속부터 과세표준의 구간이 4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나고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되었고, 2014년 귀속부터 최고세율 38% 적용 소득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소득세 개정 전후 국세체납액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은 전년대비 1조원 증가, 2014년은 전년대비 5천억 증가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세율이 상승하는 경우 전년 대비 소득세 체납발생액이 증가하므로 소득세율이 높아질수록 체납발생액이 많아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② 법인세율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나면서 2억 초과 200억 이하 법인은 기존의 22%보다 낮은 20%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감소되었다. 이 시기의 체납발생액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 체납액 1.2조원 대비 1천억 가량 체납발생액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예상과 달리 법인세율 변화가 법인세 체납발생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처럼 법인세 부담이 경감된 2012년에 선행연구에 따른 예상과 달리 법인세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가 정부지원정책이라면 법인이 인식하는 적발가능성이나 체납 시 추정가능성이 낮아져 체납유인이 높아진 것이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인세율인하 외 감면·공제 등 법인 지원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법인들이 실제 인식하는 조세부담이 증가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표 37>과 같다.

<표 37> 연구 분석 결과 요약

(1) 지역별 국세체납	
가설 1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결과 1	<p>“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p> <p>①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p> <p>②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p> <p>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국세체납액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통계)</p>
가설 2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결과 2	<p>“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p> <p>① 부도업체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p> <p>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p>
가설 3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결과 3	<p>“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국세체납액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p> <p>“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을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통계)</p>
가설 4	“지역별 고용이 체납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 4	<p>“지역별 고용이 국세체납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p> <p>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p> <p>②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p>
가설 5	“공공혜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결과 5	<p>“공공혜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p> <p>① 사회보장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p> <p>② 여가·문화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p> <p>③ 교육여건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p>
(2) 세목별 국세체납	
가설 6	“세율이 높을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
결과 6	<p>“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소득세 체납이 많이 발생한다.”</p> <p>“법인세율의 변화가 법인세 체납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다.”</p>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국세채납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채납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지역별·세목별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 채납발생 방지 및 채납정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 본 연구는 국세채납연구의 초석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① 연구주제 측면에서 법적관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채납처분절차의 하자승계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정책적인 조세채납의 실태·채납발생원인 파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② 연구대상 및 방법론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들은 기업이나 개별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국가전체의 채납통계를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 분석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세채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정책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국세채납 통계자료에 대한 정리, 국세채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 및 분석틀 제시, 국세채납의 현황 및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국세채납관련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국세채납정리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고액상습 채납에 대한 정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과세당국에서도 지역별 채납정리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채납정리를 위한 지원 및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채납정리액 규모와 채납정리 비율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역별 채납정리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채납액은 지역별 소득수준, 고용상황, 공공혜택 수준 등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발생 원인에 따라 채납정리 가능성 및 용이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역별 채납정리 목표설정 시 채납발생의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등화된 목표설정을 하고, 채납정리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영향요인별 정리규모를 분류하여 평가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국세채납정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중 국세채납을 방지·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세원 발굴의 어려움, 세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유발 등을 고려한다면 국세채납정리가 가지는 재원조달의 효과성은 더 크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국세채납정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국세채납 관련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채납정리를 통한 국가재원 확충 방안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세채납에 관한 연구주제의 특성상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가능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현재 한정적인 범위의 정보만 공개되어 있고 공개된 정보가 미세분화되어있어 이를 활용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국세채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채납차이 분석 외 개인별 채납차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에는 채납자의 개별 특성에 대한 통계가 없어 본 연구의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책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채납자의 특성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국세채납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황원오(1987) “국제적인 조세회피의 유형과 대책” 조세학술논집, 제4집, p34-52
- 조정환(1996)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Vol.8, p.243
- 전재표·윤우영(1996) “조세회피모델에 있어서 납세자특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Vol.3, p.75
- 조현연·이신남(2002)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Vol.18, p.185
- 임주영·현진권(2002) “국세 체납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세무학연구, 제19권, p223-250
- 김상호·김석범(2004) “조세회피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p101-117
- 정규언·오윤택(2005) “자영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6권 제3호 p7-28
- 유일언(2007) “현행 소득세 제도와 조세공평주의” 법학연구, 18(1), 81-104
- 이완중·유희경(2007) “외식사업자의 조세공평성 인식과 조세회피성향 분석” 외식경영학회, Vol.10 No.4, 29-51
- 최화섭(2008)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008, Vol.22, p.171
- 박명호·심태섭(2008)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p55-84
- 김민성·오시진(2010) “평률세제 개편안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조세부담의 재분배”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Vol.3(3), p.39

- 전주성(2010)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재정학연구, Vol.3(4), p.179
- 김인영·김태석(2011)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Vol.25(3), pp.127-155
- 배수진·심태섭(2011) “제재와 보상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p437-480
- 신만중(2011) “체납처분절차상 하자의 승계여부와 공매통지 등의 처분성 등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1집, p283-316
- 신성민(2011)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및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성삼·박상섭(2011) “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p41-65
- 서희열·이준규·서정화(2012) “공정사회 구현과 국세 체납세액 징수방안” 세무학
연구, 제29권 제1호, p9-42
- 임동원·오윤(2013) “조세포탈과 조세회피의 개념 구분”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p161-188
- 김재휘·강윤희(2013) “조세회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사회 및 성격 27(3), p135-153
- 전태영·변용환(2013)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학
연구, 제30권 제4호, p185-208
- 윤성만·노희천·김노창(2013) “국세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효율성 연구”
조세연구, 제13권, p37-70
- 김성태·김명규·임병인(2014)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과 누진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80호) 53-79
- 배기수(2014) “조세회피 이론과 방지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세무회계연구,
Vol.40, p.129
- 반태현·송신근(2014) “납세협력비용, 조세회피 및 조세공평성 간의 관계” 국제
회계연구, 54, 241-259

2. 국외문헌

- Muller E.(1963) “Public Attitudes toward Fiscal Progra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77 No.2
- Allingham M.G · A. Sandmo(1972)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1, p328-338
- Singh S.(1973) “Making Honesty the Best Poli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2, p257-263
- Srinivasan T.N.(1973) “Tax Evasion :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
- Yitzhaki S.(1974) “A Note on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3, p201-202
- Vogel J.(1974)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p502-504
- Mork K.(1975) “Income Tax Evasion : Some Empirical Evidence” Public Finance, Vol30, p70-75
- Spicer M. W. · S. B. Lundstedt(1976)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Vol.31
- Friedland N.·S. Maital(1978)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0, p107-116
- Herschel. F.J.(1978) “Tax evasion and its measur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Public finance, Vol.33, No.3
- Lewis A.(1979)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No.2, p245-257
- Spicer M. W. · L. A. Becker(1980) “Fiscal Inequality and Tax Eva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p171-175

- Friedland N.(1982) "A note on Tax Evasion as a Function of Quality of Information About the Magnitude and Credibility of Threatened Fines: Some Preliminary Research"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 Grasmic H. · W. Scott(1982) "Tax Evasion and Mechanisms of Social Control : A Comprison with Grand and Petty Thef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p213-230
- Clotfelter C.(1983) "Tax Evasion and Tax Rates :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 The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p363-373
- Witte A.D and D.F. Woodbury(1985)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Vol. 38, p1-13
- Slemrod J.(1985) "An Empirical Test for Tax Evas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27
- Jackson B · S. Jones(1985) "Salience of Tax Evasion Penalties versus Detection Risk"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Abstract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Lee June KIM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recent extension of the government's functions and roles, the financial demand including next year's scale of budget exceeding 400 trillion won (400.7 trillion won), which is a 3.7 percent increase from last year, is increasing. Even though the government's realistic measure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financial demand is national tax nonpayment readjustment, a relevant systematic study is not being conducted. Since reasonable nonpayment readjustment standards can be set and assessments regarding performances are possible only when year-on-year and regional present situation developments and influence factors are figured out in advance, a corresponding study has to be carrie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and it carried out an analysis of empirical data with regard to the national tax statistical data targeting the actual condition of national tax paymen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tudy methods. In order to figure out the factors influencing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in detail, the effect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ocial statistics variables on the default accruals was analyzed by classifying the amount of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into regions and the effect of variation in tax rates on the amount of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was analyzed by classifying into tax item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gional income levels regarding default of national taxes by measuring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and an individual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of *respective regions*, a region with a high level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generates greater amount of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This is the same finding as the prediction in the previous study related to tax avoidance which claimed that the tendency of tax avoidance goes higher as the income level goes higher. **Secon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regions with higher numbers of dishonored companies an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s economically challenged areas in terms of regional income level, regions suffering from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saw greater amounts of disposition of national taxes. **Third**, based on the prediction of the previous study which insisted that there is a high tendency of tax avoidance by the self-employed which find leaving out income easy due to the low possibility of exposure, the hypothesis that there will be greater amounts of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in the regions with higher rates of nonwage workers – the 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workers – was examin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rate of nonwage workers and the amount of default of national taxes and unlike the prediction, greater amounts of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are generated as the rate of nonwage workers went higher. Even though the self-employed – non-wage workers – have understated causes but default chargeable national taxes, this result is brought about by low levels of default since the chances of imposing sanctions such as tax investigation is higher compared to wage workers. **Fourth**, by measuring the employment indices which have a high correlation with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with the social statistics variables – unemployment rate, employment rat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disabled people employment rate, the relevance with the amount of default of national taxes was examined. As a result, regions with higher unemployment rate had greater amounts of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and employment rate and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did not have an effect on the amount of disposition of national taxes. This is because there is a direct influence on the amount of default than toward the unemployed who lack the ability to pay taxes. In addition, there were greater amounts of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in regions with a low disabled people employment rate. This can be analyzed to have arisen from the prediction that the degree of national tax payment faithfulness will go higher as a result of trying to receive the government support benefits through disabled people employment policy by positively perceiving the benefits of the administration of state. **Fifth**, when there is a high level of public benefits, taxpayers perceive them as the benefits of tax payment and the degree of national tax payment faithfulness is likely to go higher. Thus, three indicators –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 100,000 people which reflect the level of social security, the number of culture based facilities and sports facilities per 100,000 people

which reflect the level of leisure and culture, and the number of private institutes per 1,000 people which reflect the educational conditions – were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public benefits as the national statistical index. As a result, when the regions had low levels of the three aforementioned indicators, greater amounts of default of national taxes were generated and the regions with a low level of public benefits had greater amounts of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In the analysis of the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according to *respective tax items*, based on the previous study which argued that tax avoidance behavior frequently occur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ax avoidance causes due to higher tax rates, how the amount of disposition of national taxes differs according to the variations of tax rates was examined.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ariations of the amount of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according to the tax rate changes of income taxes of 2012 and 2014, the amount of default of national taxes increased as the tax rate goes higher.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mount of default of national taxes of the corporate tax of 2012 according to the tax rate variations, unlike the predic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the corporate tax rate variations do not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amount of nonpayment of corporate taxes. Even though there was a decline in the corporate tax rate, the causes can be the increase of the practically perceived tax burden due to the complex application of support policies including tax exemption and tax deduction or the increased default causes due to the low possibility of exposure felt by corporate bod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wo senses; **firstly**, by suggesting the organization of the statistical data of default of national taxes, the meaningful variables and framework affecting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and the systematic description with regard to the present conditions and influence factors of default of national taxes, this study arranged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studies related to disposition of national taxes and **secondly**, by setting the differentiated nonpayment readjustment goals and conducting performance assessments which took into account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occurrence of nonpayment of national taxes, this study contributed in a reasonable national tax nonpayment readjustment and expansion of national finance.

Keywords : default of national taxes, tax avoidance, respective regions, respective tax items, nonpayment readjustment, national finance

Student Number : 2013-21887